



자유주의 이후 지역주의의 변화와 과제

- 4 <권두논문> 한-EU 관계의 새로운 청사진: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와 지역주의의 복원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지역통합연구부장)
- 13 트럼프 현상과 자유세계질서의 위기
차태서 (중앙대학교 국익연구소 전임연구원)
- 28 변환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기로에 선 동아시아 지역금융협력의 현재와 미래
이용욱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41 러시아식 자유주의의 한계: 트럼프 등장 이후의 러시아 대외정책
정재원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 59 자유주의 이후의 지역주의: 브렉시트와 트럼프 등장 이후 지역주의의 과제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지역통합연구부장)

트럼프 현상과 자유세계질서의 위기

차태서 (중앙대학교 국익연구소 전임연구원)

이 글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세계정치경제체제에 갖는 함의를 살펴보고 새 미국 행정부의 대외전략의 방향성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탈냉전기 미국대전략의 연속성과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자유주의적 합의에서 이탈한 새로운 책순주의적 대외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나아가 트럼프의 외교정책이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에 끼칠 영향을 예측한 후, 결론적으로 트럼프 당선이 자유세계질서의 미래에 대해 갖는 시대적 의미와 한국의 국가전략에 대한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변환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기रो에 선 동아시아 지역금융협력의 현재와 미래

이용욱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3년 이후 G20과 IMF의 주도로 글로벌과 지역 차원의 금융안전망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글로벌과 지역 차원의 금융안전망 정책공조는 역설적이게도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당위성과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동아시아의 입장에서 IMF와의 정책공조는 필요하지만, 현실점의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수준을 볼 때 IMF와의 정책공조는 그 조건과 구조에 따라 양날의 검이 된다. 양날의 검이 함축하는 부정적인 가능성은 다음 아닌 동아시아의 금융협력이 결국 IMF의 주니어 파트너가 되어 운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역량강화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요청된다. 2018년 아세안+3 회의는 한국 금융외교의 기회와 도전이다. 한국은 오는 2018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의 공동 의장국으로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역량강화를 선도할 기회를 가졌다. 특히 아세안+3이 2010년에 합의된 CMIM 협정문을 처음으로 정기 점검하고 2018년 회의에서 개정하기로 하여, 2018년 회의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제도약을 위한 한국 금융외교의 정책방향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대한 “공동주인의식(We-Ownership)” 확립이다. 둘째, 협상과정에서 간헐적으로 나오는 “도덕적 헤이 담론”의 성찰적 맥락화(Reflexive Contextualization)와 이를 통한 회원국 간 신뢰 제고이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금융협력이 “제도적 생존”을 넘어 다른 지역의 금융협력에 모델로 제시될 수 있다는 비전을 공유하는 담론 외교이다.

러시아식 자유주의의 한계: 트럼프 등장 이후의 러시아 대외정책

정재원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재 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국가의 주도하에 반미/반서구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유시장경제 자체에 대한 반대는커녕 정반대로 적극적인 행위자가 되려는 모습에 주목해야 한다. 즉 세계자본주의체제 내 러시아의 위치와 역할의 한계 속 중심부 서구 국가들의 방해를 넘어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국제정치경제질서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세계자본주의체제를 주도하지 못하는 국가로서 극동과 시베리아 개발이나 아태 지역과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강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하더라도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거부하고 고립주의 혹은 자국우선주의와 같은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는 불가능하다. 또한 서구와의 대립 속에서 극동개발부를 신설하고, 중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석유가스의 수출을 비서구 지역으로 다변화하며,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하이조약기구 등 다양한 국제조직들을 통해 반서구적 입장을 강화하고 아시아중시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근본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 러시아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무기로 당분간 서구와는 서로 (신)자유주의에 반하는 경향에 따라 움직이면서도 동시에 그 출구로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는 (신)자유주의 원칙하에서의 협력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개발의 필요에 따라서는 서구 국가 자본들과도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러시아식 자유주의는 러시아와 유라시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상황에 따라 모순적인 두 가지의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 사업은 금융이 아닌 실물 경제로의 자본의 흐름을 만들어 낼 것이 명확한데, 비록 이 지역 국가들이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개발과 발전의 담론들에 취약하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러한 시기에 한국은 보다 진보적이고 상상 가능한 독자적 접근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 이후의 지역주의: 브렉시트와 트럼프 등장 이후 지역주의의 과제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지역통합연구부장)

21세기 들어 서구 각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리즘과 2008년 미국 월가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는 당시까지 전 세계에서 미국이 주도했던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하였다. 이런 가운데 2016년 5월의 브렉시트(Brexit)와 같은 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는 많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가 도래하였다는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실제로 2017년 초반 국제경제에서 주목되는 두 가지 현상 역시 브렉시트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였으며 이들의 공통점은 국익우선을 크게 높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지역주의는 자유주의의 소산인 지구화(globalism)를 배경으로 다자주의, 민주적 거버넌스 등을 통해 지역 협력을 이끌어 내자는 하나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과정이다. 이런 전제에서 이 글은 20세기 중반 이후 지탱되어 오던 미국 주도의 국제자유주의의 현실과 자유주의의 터전에서 기능적으로 발전되어 온 지역주의의 변화 방향이 자유주의의 위기 이후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대처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토론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 글은 자유주의 이전의 국제관계가 홉스적 시각에서 설명이 가능했고, 자유주의의 원리가 밀과 로크적 관계에 근거하였다면, 자유주의 이후의 국제관계와 지역주의는 사회, 문화, 윤리적 규범 등에 의하여 보다 호혜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실천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말하자면, 홉스적 적대관계, 로크적 경쟁관계를 넘어 칸트적 시각의 관계 규정을 '친선(friendship)'으로 보고 이것이 향후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진보적 자유주의' 혹은 '포스트 자유주의' 등은 경제적 정의와 상호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연대와 박애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소수의 기득권의 이득을 지키는 정치에서 벗어나 정체성을 공유하고 시민사회가 매개가 되어 시장과 국가가 조화를 이루어 균형잡힌 이익에 기반한 다수의 정치로 이동해야 함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자유주의의 관념은 시대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 논리적 근거를 새로 제시해야 하며, 물질적 구속을 넘어 자기이익의 정당화를 위한 윤리적 개념의 설정과 자구(自救)의 논리가 아닌 이타의 논리를 모순되지 않게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여전히 생존의 문제가 국제관계의 핵심임을 간과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요인은 삶과 죽음의 선택적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통해 자기이익을 실현시키는 것이며, 향후 지역주의는 스스로의 자율성의 증진과 더불어 여전히 강대국이 이끌어 가는 경쟁적인 블록화의 이중적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함을 강조한다.

〈권두논문〉

한-EU 관계의 새로운 청사진: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와 지역주의의 복원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지역통합연구부장)

1. 한-EU 관계의 새로운 기대?

지난 7월 18일 우리나라 외교부 제1차관이 브뤼셀을 방문하여 EU 대외관계청(EEAS)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환담하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자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특별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우리 측은 또한 “한반도 주변 4강 중심의 외교 틀을 넘어서 유럽과의 외교를 강화”할 것을 피력하면서 올 하반기에 ‘한-EU 간 차관급 고위 정치 대화’를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¹⁾ 이번 만남이 비록 한-EU 간 치러지는 정례적인 행사라 할지라도 맥락 차원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즉, 신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아세안 및 EU 특사 파견에 비추어 볼 때 지난 10여 년간 집중해온 4강 중심외교, 대북외교에서 벗어나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보다 유연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교롭게도 곧이어 7월 19일에 발표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말하자면 대(對) 아세안 외교, 대 EU 외교의 부활은 그동안 침체되었던 다자주의, 지역주의 외교의 복원을 예상케 한다. 이는 더 나아가 남북 문제에 있어서 대북외교만이 아닌 통일 외교의 부활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한-EU 간 만남을 계기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외교현안에서 소외되었던 EU의 기본 대외전략이 무엇인지 큰 틀에서 재점검해 보고, 신정부가 추진하려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등의 신(新)전략을 EU와 어떤 공유점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진단해 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양자 관계에 관한 미래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지역주의 관점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2. EU 대외전략의 파편들

EU의 대외전략(External Action)은 ‘세계전략’, ‘지역전략’, 그리고 ‘개별국

가전략'으로 세분화된다.²⁾ 이들 전략은 개별적이라기보다는 일관성(coherence)과 응집력(consistency)의 원칙에 따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브뤼셀의 관료들도 이 점을 현장에 투영하려고 매우 노력한다. 미시전략 수준에서 EU의 대 한반도 전략을 추적하려면, 거시전략으로서의 세계전략을 시점(時點)별로 파악하고, 이어서 지역전략으로서 대 아시아 전략을, 그리고 비로소 개별국가 전략으로서 남북한 각각에 대한 전략을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 전략들 간의 일관성과 변화를 찾는 것이 대 EU 외교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우선순위의 일 것이다. 이때 세계전략에서 시점이 중요한 것은 EU의 세계전략이 국제환경 변수에 따라 장기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세계전략 차원에서 EU가 가장 최근에 내놓은 문서는 2016년 6월의 “비전의 공유, 공동의 행동: 보다 강력한 유럽(Shared Vision, Common Action: A Stronger Europe)”이다. 이는 2003년 “유럽안보전략(ESS: European Security Strategy)”의 개정판이다. 2003년 전략은 미국이 독주하는 세계 질서가 아닌 그들과 협력하는 동반자로서의 EU의 위상과 가치를 처음 드러낸 것이었다. 이러한 존재감은 2004년 동유럽으로의 양적 확대, 2005년의 유럽헌법 도입 시도 등 외적 팽창과 내적 자신감으로 한껏 고조되었다. 당시 학계에서 한창 논의되던 ‘유럽화(Europeanization)’는 EU의 그러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었다. 반면 2016년 전략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동유럽과 남유럽의 재정위기, 2014년의 우크라이나 사태, 2015년의 그리스 채무 위기, 난민위기와 잇단 테러리즘 그리고 2016년 상반기의 브렉시트 결정 등 EU가 침체된 가운데 등장했다는 데서 큰 차이가 있다. 유럽은 계속되는 악재로 회원국들 간의 공동 비전과 정책적 연대감이 상실되었고 분열 위기마저 고조되었으므로 이를 대외적 존재감의 확보를 통해 극복하려는 것이다.

둘째, 중범위 전략으로서 지역전략-(동)아시아 전략-은 대체로 지역간주의(inter-regionalism) 성향을 띠고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은 비교적 큰 수준에서 개별전략으로 접근하지만, 나머지 국가들-아세안, 중동, 사하라 남쪽 아프리카 등-은 경제규모와 문화, 공동 현안으로 묶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가운데 EU의 대 아시아 전략은 1994년 처음 등장하였다. 당시 EU의 당면 목표는 자신들의 경제적 존재감(presence)을 아시아에 드러내겠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2001년에 발간된 후속 문서에서는 경제적 존재감과 더불어 정치 대화(political dialogue)를 통해 아시아에서 평화와 안보에서 일정한 기여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혀 역할의 확대를 드러냈다. 이것이 실천행위로 한반도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EU가 북한과 수교한 것이었다. 아시아 지역전략의 가

장 최근 버전은 2012년의 것이다. 여기서 EU는 글로벌 차원의 대량살상 무기 확산 방지에 주력하면서,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환경 보호, 빈곤 퇴치, 경제적 불평등 및 보건 분야 개선 등을 포함한 포괄적 안보와 지속가능한 정책의 촉진을 강조하였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EU의 외교 역량을 다자주의 원칙에 의해 행위자들의 위상에 따라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는 것으로, 외교의 유연성과 상대의 책임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셋째, 한반도 정책은 대북정책과 대한정책으로 나뉜다. 1993년 마스트리트 조약 이후 EU는 한국과 양자 및 다자의 중층적 틀 속에서 관계를 증진시켜오고 있다. 눈에 띄는 특징은 1997년 이후 10여 년간은 KEDO(1997, 2001), ASEM(1996) 등 지역주의 및 다자주의 틀 속에서 양측의 관계가 강조된 면이 있고, 그 이후 다시 10여 년간은 ‘한-EU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1996, 2010), ‘자유무역협정(FTA)’(2010), 그리고 ‘위기활동 기본 협정(Crisis management operations)’(2014) 체결처럼 양자주의 틀이 보다 강조된 면이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EU의 대북전략은 다자주의가 강조되던 1996년 이후 약 10여 년간 점증적으로 활발하였으나, 2002년에 발표된 ‘2001~2004 국가 전략 문서(Country Strategic Paper 2001~2004)’ 이후 별다른 공식 진전이 없다.³⁾ 물론 EU의 대북전략이 주춤한 것은 2006년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UN의 대북 제재 이후 별다른 동력을 얻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3. EU 대외 전략의 일관성과 응집성

앞서 논의한 것들을 항목에 따라 도표로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U 대외 전략의 단계별 일관성

항목	세계전략	(동)아시아 전략	한반도 전략
우선순위 (priorities)	EU의 위상 재고 및 책임감(A)	존재감의 유지 및 영향력의 확대(B)	(A) + (B)
당면목표 (goals)	다자주의의 확대 (C)	포괄적 안보(D)	(C) + (D)
형태 (manners)	규범 및 가치의 생산(E)	지역간주의(F)	(E) + (F)
당면변수 (negative effect)	유럽의 분열(G)	능력과 기대의 불일치(H)	(A + B + C + D + E + F) - (G + H) + α (?)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EU 관료들의 가장 큰 고민은 정책의 일관성과 응집성을 현장에 실천적으로 투영하는 것이다. 이는 EU의 정체성과도 관계되는 것으로 그들이 주권국가와는 달리 단일 리더십이 아닌 오로지 제도와 법률의 중층적 효과에 따른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제도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생기는 ‘스파게티 보울 효과(Spaghetti Bowl Effect)’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있다. 말하자면 앞서 설명한 중층적 대외전략은 수많은 하위 세부 전략과 연계되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제한된 정치적 리더십으로 이것을 일관된 실천으로 유지하는 것이 브뤼셀 관료들의 핵심 과제인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벌어지고 있는 EU의 분열 및 그들이 가진 능력과 기대의 불일치(Expectation-Capability Gap)는 정책 실천의 장애요인이 된다.

능력과 기대의 불일치는 물질적 수단과 비물질적 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질적 능력의 한계는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으나 EU의 예산을 대략적이나마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EU의 연간 예산 추이(2014~2020)

(단위: 백만 유로)

연도	총 예산	글로벌 유럽 항목 예산
2014	142,690	8,325
2015	162,273	8,710
2016	155,004	9,167
2017	155,631	9,432
2018	159,514	9,825
2019	164,123	10,268
2020	168,797	10,510

출처: EU annual budget life-cycle/EU Commission, Budget-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2017 이후는 잠정치)

2017년 EU의 GDP 성장 전망치가 1.7%로 매우 낮게 예상된다. 따라서 장기불황과 내부 분열 위기로 예산 압박을 받고 있는 EU로부터 낙관적인 예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⁴⁾ 도표에서 보듯이 2015~16년간 채택된 총 예산(adopted budget)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줄었다. 더구나 EU 전체 예산 기여에서 평균 10.7% 정도를 차지하는 영국이 2년 안에 떠나갈 경우, 그들의 금전적 기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⁵⁾

비물질적 수단으로서 EU의 기대치와 능력 간의 괴리는 EU가 가진 정체성,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역량이 적절한 수준의 가치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 이는 기능적으로 보았을 때 내부 분열로 정책의 집중이 간헐적 동력에 머물고, 추진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서 생기는 문제이다. 또한 물리적 강제력과 리더십의 부재, 그리고 강력한 시대정신의 실종에서 파생된 것이기도 하다. 난민 대책의 불협화음, 테러리즘의 지속,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대 러시아 정책의 혼란, 폴란드, 헝가리 등 몇몇 동구권 국가들의 반(反) EU적 태도는 비물질적 차원에서 그러한 괴리를 드러내는 것이다.⁶⁾ 특히 난민 위기에서 보여준 유럽 시민들의 태도는 그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인권, 법치, 민주주의 등에 기반을 둔 EU식 지역주의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으며 이는 서구식 시대정신의 위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4. 위기의 EU, 그들의 대외전략과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의 접점

앞선 도표의 ‘한반도 전략’에 표현된 대로 EU의 한반도 전략은 세계전략 및 (동)아시아 전략 간 각 항목의 중층적 연관 속에서 도출된다. 특히 난민 위기, 테러리즘 등에 따른 최근 유럽의 위기와 분열은 능력과 기대의 불일치와 별개로 변수 α 를 초래한다. 변수 α 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정 정도 맞춤형 전략에 의존하는 브뤼셀의 분위기 혹은 무드(mood)와도 같은 것이다. 변수 α 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알 수 없다. 이는 정치인, 관료, NGO 등 어디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것으로, 내부 이익집단, 세계정세의 변화, 혹은 상대와의 협상 분위기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의 자유주의의 위기나 포퓰리즘의 만연은 음(-)의 효과를 낼 것이고, 아세안이나 일본과 같은 역량 있는 실체와의 동반자 협정 혹은 FTA 체결 분위기는 양(+)의 효과를 낼 것이다.⁷⁾

그렇다면, EU의 한반도 전략에서 α 가 EU는 물론 우리나라 모두에게 양(+)인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신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에서 어떤 실천적 행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구상이 향후 대 EU 외교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먼저, ‘대선 공약집’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언급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한·중·일 3국협력을 강화하고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다자협력체제 구축
- 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를 통합하는 동북아책임공동체 형성
- 아세안/인도의 외교를 주변 4강과 유사한 수준의 전략적 수준으로 격상
- ‘평화의 축’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 북방 지역을 ‘변영의 축’으로 삼는 신(新)남방 정책 및 신(新)북

방 정책 추진

-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진정을 위한 제도 구축
- 한중일 3국 협력 강화 등의 소다자 협력 추진
- 다양한 형태의 중견국 협력

안타깝게도 이 두 전략 문서의 어디에도 EU를 직접 언급한 부분은 없다. 그러나 이는 EU의 위상이나 위치가 사소하기 때문이 아니라, EU의 분열과 위기로 그들의 존재감과 가시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가시성 약화는 반대로 보았을 때 EU의 대 한반도 정책이 그동안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2000년대 초중반 EU 주도의 지역주의 및 다자주의 논의가 활발했을 때의 성공 조건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정부의 전략 문건이 대 EU 관계에서 주목되는 것은 EU 통합의 기본 동력이었던 지역주의 원리가 상당 부분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다자안보’와 ‘통합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이는 곧 지난 10년간 주춤하였던 다자주의로의 지향과 지역주의의 복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EU와의 관계 활성화는 위기에 빠진 동아시아의 지역주의 모델의 부활 가능성을 열어줄 뿐 아니라, 한국이 주도하는 지역주의의 복원을 통해 주춤하고 있는 EU의 동아시아 외교를 한국이 선제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조건을 담고 있다.

첫째, 동아시아 차원에서, 한중일 (소)다자주의의 추진은 ‘동북아시아 공동체’와 ‘EU’ 간 지역주의(inter-regionalism)의 부활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다. 또한 동북아공동체는 지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글로벌 수준의 정치적 책임감 확보라는 측면에서 미국, EU와 더불어 한국이 3대 축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한반도 전략 차원에서 볼 때, 한국외교는 (6자회담의 부활 가능성은 별도로 하더라도) EU가 6자회담의 부활과 지속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EU의 글린 포드(Glyn Ford) 유럽의회 의원과 베니타 페레로-왈드너(Benita Ferrero-Waldner) 집행위원은 2003~2006년에 청와대를 방문하여 EU가 6자 회담+1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다.⁸⁾ 최근에는 아니발 카바코 실바(Anibal Antonio Cavaco Silva) 전 포르투갈 대통령도 EU가 한반도 긴장 완화에 적극적인 기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연계하여 보자면, EU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UN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EU-북한은 최소한의 정치적 관계는 유지하고 있다. 2015년 평양에서 양자 간 정치 대화(political

dialogue)가 진행되었듯이 북한의 서방으로의 유일한 의사소통 통로는 EU 임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 세부 전략 차원에서 볼 때, 대북 UN 인권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는 EU의 역할을 적극 지지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단순히 경성안보의 확보뿐 아니라, 시민(people)과 사회의 안녕 및 가치실현이라는 기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EU의 대북정책뿐 아니라, 그들의 가치가 세계적 윤리규범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인권의 차원이 대북결의를 넘어 불편한 동아시아의 역사와 현재의 정치적 억압을 해소하기 위한 세계 보편적 가치에 두루 준용되도록 EU와 규범 창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넷째, 당면 과제와 관련하여, ‘한-EU 기본협정’과 2014년에 체결된 ‘위기활동 기본협정’을 실천적 과제로 더욱 적극적으로 생산해낼 때가 되었다. ‘한-EU 기본협정’의 핵심은 양자 간 포괄적 안보에 대한 대처를 주요 의제로 삼고 있으므로 이를 과제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 한다. 양자 간 정치 대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등 일정 부분 성과도 있으나 하부 실천 프로그램의 평가와 연계 프로그램의 수립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EU가 6자회담 등 중범위 수준의 전략에서 배제되어 있는 한, 정책 의제의 확대나 심화는 한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즉 EU가 소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한다. 한편, ‘위기활동 기본협정’은 EU의 소말리아 해적 퇴치 작전에 한국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구체적 목적이 있다. 그러나 EU의 위기관리 및 대응 전략의 본질은 EU가 회원국의 국경선을 넘어 국제적 활동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따라서 EU 측에서 볼 때 한국의 위기관리 참여는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역량을 유럽과 공유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유럽의 관심사뿐 아니라 한국의 관심사에 유럽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5. 지역주의 외교의 복원

국제정치에서 ‘지역주의(regionalism)’는 국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이다.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일정의 국가들이 일부 지역을 거점으로 하위 국가 수준(sub-states), 비정부 행위자들(non-state actors)을 아우르며 제도와 전략을 통해 하향식 방법으로 서로의 협력과 조화를 꾀하는 것이다. 반면, 지역화(regionalization)는 개인 또는 집단이 국경을 넘어 다층적인 관계 맺기를 하는 물리적 패턴을 일컫는다. 이민자 문제, 무역과 자본의 이동, 미디어의

확산 등은 그러한 예이다.⁹⁾ 199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움트기 시작했던 한류와 동아시아 문화교류, 그리고 2000년대 이후 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동북아시아의 지역화를 크게 증진시켰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의 양자주의, 4강 중심, 대북정책에 초점이 놓인 우리 외교는 상대적으로 지역주의 동력을 잃었다. 그리고 EU는 능력과 기대치의 괴리, 분열과 실망 등으로 위기에 놓여 있다. EU의 외교적 자산은 물리적 수단뿐 아니라, 비물질적 수단에서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21세기형 지역주의는 국가 주도의 하향식 메커니즘뿐 아니라 무역, 기술, 정보, 그리고 문화 교류 등 상향식 혹은 수평식 지역화가 중첩되어야 한다. 동북아의 지역주의 복원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뿐 아니라 글로벌 외교의 주체로서 EU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위기에 빠진 EU가 동아시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여 자신들의 위상을 만회할 수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것이 대 EU 외교에 직면하는 하나의 전략이다.

주석

- 1)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헬가 슈미트(Helga Schmid) EU 대외관계청 사무총장 면담,” 보도자료 17-409.
- 2) 1993년 마스트리트 조약 체제하에서 구분되었던 ‘대외정책(External Relations Policy)’과 ‘외교정책(Foreign Policy)’은 2009년의 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 EU 대외관계청(EEAS)의 업무로 일원화되었다.
- 3) 2015년 평양에서 양자 간 정치 대화(political dialogue)가 진행되었듯이 EU-북한 관계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 4) European Commission, “Spring 2017 Economic Forecast,”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economic-performance-and-forecasts/economic-forecasts/spring-2017-economic-forecast_en
- 5) Gabriele Cipriani, “Financing the EU Budget,” *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 (Brussels, 2014).
- 6) Euobserver, “Poland’s ‘July coup’ and what it means for the judiciary,” 19 July, 2017.
- 7) “18th Round of Negotiation on the Japan-EU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 외무성, 2017년 4월 7일.
- 8) EU Parliament Delegation for relations with the Korean Peninsula, “Report on Korea IPM,” Agenda No OJ, Type FD, October 7, 2004(CR\506613EN.doc) (Report of 7thEP/KoreaInter-ParliamentaryMeeting22-25April2003); The EU Press Release, “EU-Korea Summit, September 9th,” Brussels, 08 September, 2006.
- 9) Mark Beeson and Richard Stubbs, *Routledge Handbook of Asian Regionalism* (London & New York, 2012).

❖ 저자 약력

■ 도종윤

現 제주평화연구원 지역통합연구부장. 브뤼셀 자유대학교에서 정치사회학 박사학위 취득. 연세대 연세-SERI EU센터 Post-Doc,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성균관대, 이화여대, 건국대 강사 역임. 주요 논문으로 “환유를 통한 국제정치 텍스트의 해석(2014)”, “국제정치학에서 주체물음(2013)”, “유럽연합의 개발협력전략(2013)” 등이 있음.

목 차

1. 서론: 세계사적 격변의 신호?
2. 전후 미국 대전략 패러다임의 지속과 변동
 - 가. 자유국제주의 컨센서스
 - 나. 오바마 행정부의 “실용적 국제주의”
3. 잭슨주의 전통과 트럼프 독트린
 - 가. 잭슨주의 독트린
 - 나. 트럼프의 세계전략
4. 동아시아: 지정학적 갈등의 도래?
5. 결론: 미국발 자유세계 질서의 위기?

트럼프 현상과 자유세계질서의 위기

차태서 (중앙대학교 국익연구소 전임연구원)

1. 서론: 세계사적 격변의 신호?

- 앤드류 바세비치(Bacevich 2017)의 표현을 빌자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당선은 냉전 이후 지속된 “미국의 대망의 시대(America’s Age of Great Expectations)”가 종식되고 “대공허(the Great Void)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
 - 미국패권의 지도 아래 자유세계질서가 확립되어 “역사의 종언”이 실현 될 것이라는 탈냉전기의 거대한 열망이 사라지고, 부의 양극화와 항구적 전쟁상태라는 어두운 현실에 대한 좌절과 분노가 지배적
 - 예측과 달리, “대망의 시대”의 대표주자로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적극적 대외개입주의를 상징했던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이 대선에서 패배한 것은 미국사회의 분위기 변화가 매우 심층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예시
 - 물론 이러한 미국 내 변동은 금융위기와 이민의 증가 등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부정적 효과가 가중됨에 따라 경제적, 존재적 차원에서 근본적 불안을 느낀 대중(大衆)사이에서 포퓰리즘과 민족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전 세계적 상황과 깊이 연결
- 왜 우리가 최근 계속해서 예상을 벗어난 놀라운 사건들(극우/극좌 세력의 부상,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등)을 세계정치의 장에서 조우하게 되었는지는 거시적 차원에서 고찰해 보아야 설명 가능
 - 여론조사들은 개별 사회현상들을 각각의 고립된 사태들로 인식해 분석하지만, 현재의 일련의 흐름들은 전 지구적인 차원의 구조적 조건변화라는 맥락을 먼저 이해해야 함(Blyth 2016)
 - 마치 칼 폴라니(Polanyi 1944)가 전간기의 위기와 파시즘의 부상을 이해하기 위해 19세기 자유방임문명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듯,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에 대한 포퓰리즘적 반동이라는 설명틀을 통해 현 상황의 접근 필요

2. 전후 미국 대전략 패러다임의 지속과 변동

탈냉전의 국제질서에서

미국은 자신의

외교적 이념을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투사하고

세계질서를

자신의 이미지대로

변형해갈 수 있는

역사적 기회포착

가. 자유국제주의 컨센서스

- 2차 대전 이후 초당적 지지하에 추구된 미국대전략의 기본은 “자유패권(liberal hegemony)”전략(Posen 2014)
 - 미국의 물질적 능력을 토대로 하여 미국적 가치에 맞게 자유국제질서를 구축해가는 것을 목표. 다자주의적 안보 및 경제기구의 창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전 지구적 전파, 세계최강의 군사력 건설 및 해외 전진배치 등이 전략의 수단(Ikenberry 2011; Kagan 2012)
- 탈냉전의 국제질서는 주적이 사라진 미국의 대전략 수립에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커다란 기회를 제공
 - 근대국제체제 역사상 유례가 없는 단극체제의 도래는 미국이 원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외교정책을 통해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우호적 대외환경을 의미
 - 무정부적 국제체제의 구조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상황에서, 미국은 자신의 외교적 이념을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투사하고 세계질서를 자신의 이미지대로 변형해갈 수 있는 역사적 기회포착. 대항강대국이 사라진 덕분에 수정주의적인, 혹은 혁명적인 미국의 대전략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부재(Jervis 2011)
 -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역사의 종언”(Fukuyama 1992)을 노정한다는 승리주의적 전망은 소위 경기 후퇴가 사라졌다는 “신경제”의 부상과, 빌 클린턴(Bill Clinton) 정부의 “개입과 확장”의 정책을 통해 전 지구적으로 확산
- 2001년의 9/11테러는 일견 이러한 미국 주도의 자유국제질서에 대한 “역풍(blowback)”(Johnson 2000)으로 해석될 수 있었으며, 미국의 개입주의적 국가전략전반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계기로 인식될 여지도 존재
 - 하지만 전 지구적 테러리즘과 이를 후원한다고 주장된 “악의 축”을 안보화 대상으로 삼으며 외교정책의 주도권을 장악한 신보수주의자들은 이 역사적 국면을 세계정치질서의 변혁을 가속화하는 기회로 활용
 - 조지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는 미국의 정체성과 역할을 영구평화화로의 세계역사적 진보를 이끄는 “혁명” 주체이자, “야만적”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맞서는 “문명”세력으로서 정의
 - 이라크에의 선제공격전을 통해 실행에 옮겨진 이른바 “부시 독트린”은

세계질서의 민주적 변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유국제주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다자주의 외교나 전쟁법 등의 자유주의 규범을 경시하고 군사주의적, 일방주의적 면모를 띠는 점에서 월슨주의의 불완전한 계승을 의미

-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이미 1990년대에 자유국제주의의 “경성 이데올로기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었다는 점. 9/11테러 이전에 신월슨주의는 마치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비슷한 수준의, 세계역사의 진로에 대한 유사과학적 예측과 확신을 피력.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이외의 대안은 모두 소멸되었다는 탈냉전기의 목적론적 역사철학은 네오콘의 급진적 이데올로기가 부상할 수 있는 이념적 토양을 미리 제공 (Smith 2012: 346-362)

○ 그러나 근대국제체제를 초월하려 시도했던 네오콘 주도의 “부시혁명” (Daalder and Lindsay 2003)은 장기지속 불가능

- 민주평화론과 자유방임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확신은 중동전쟁의 실패와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로 붕괴. 이상주의적인 세계변혁 목표와 가용 자원에 대한 비현실적 계산에 기반한 일방주의 전략이 위협스러운 비율로 혼합된 “외발이 월슨주의(one-legged Wilsonianism)”(Deudney 2007: 186)는 패권국가로서 미국의 연성, 경성권력기반을 모두 크게 침식
- 전 지구적으로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진행되는 가운데, 무슬림 세계는 지속적인 폭력의 악순환으로 빠져들어 갔으며, 미국의 지도력에 대해 많은 세계인들이 의문을 제기

나. 오바마 행정부의 “실용적 국제주의”

- “제국적 과잉팽창”이 초래한 위기국면에서 출범한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의 8년 집권기는 미국 대전략에 있어 일종의 조정기
 - 미국패권의 상대적 하락이라는 구조적 조건에 직면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신보수주의적 외교정책의 후과에 대해 반성하면서, 군사주의적 정권교체독트린의 폐기를 선언
 - 2009년 이른바 “카이로 선언”(Obama 2009)을 통해, “어떤 정부체제도 다른 국가에 의해 강요받을 수 없으며 그래서 안 된다”는 점을 강조
 - 오바마는 미국이 단독으로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계국가들과의 협력, 즉 다자주의적 외교를 미국대의 정책의 주된 접근법으로서 추구
- 오바마 독트린을 설명하고자 한 여러 논의들은 “혼합”, “절충”, “실용” 등의 표현을 많이 동원

“제국적 과잉팽창”이 초래한 위기국면에서 출범한 버락 오바마 (Barack Obama) 행정부의 8년 집권기는 미국 대전략에 있어 일종의 조정기

**전후 미국의외의
컨센서스인
자유국제주의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이라크전의 실패와
전 지구적
경제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대처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반적 기초가
안보정책에 있어
현실주의의
색채를 가미**

- 전후 미국의외의 컨센서스인 자유국제주의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이라크전의 실패와 전 지구적 경제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대처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반적 기초가 안보정책에 있어 현실주의의 색채를 가미
- 존 아이켄베리(Ikenberry 2014)는 이 점을 부각해 “실용적 국제주의 (pragmatic internationalism)”라는 명칭을 부여. 국제주의를 추구하되 열의에 차 있기보다는 지쳐 있는 기색이 짙고, 변혁적이기보단 실무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오바마 정권의 전략기조는 자유국제주의적인 것만큼 현실주의적이라고 진단
- 실제로 오바마는 전임 행정부의 과잉팽창(overstretch)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하였으며, 1기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과 2기 유엔대사 사만다 파워(Samantha Power) 등이 대표한 민주당의 주류 자유개입주의에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
- 가령, 2014년 시리아에 대한 “제한적” 개입결정은 오바마의 현실주의적 혹은 실용주의적 입장이 관철된 중요한 사례. 화학무기 사용을 통한 민간인 학살 등 아사드 정권의 국제법 위반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아가 그만큼 중요한 핵심적 이익사안 혹은 사활적 위협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바마는 직접적 군사력 투입을 선택하지 않았음(Goldberg 2016: 72-73)
- 같은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약화된 국력과 대규모 예산적자상황을 반영해 동맹국들에게 책임분담(burden-sharing)을 강조하는 흐름도 오바마 정부 시기에 이미 등장(Goldberg 2016: 78)
-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독트린의 근저에 민주주의나 인권 같은 미국적 가치의 확산이라는 자유국제주의의 기본원칙이 존재. 다만 그 대원칙의 실행에 있어 오바마는 전임정부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자기억제와 신중성을 보여주었을 따름

- 오바마 독트린에 대한 평가는 매우 극단적으로 갈리는 양상.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자체에 모순적 요소들이 뒤섞여있는 현실을 반영
 - 가령, 콜린 듀익(Dueck 2015)은 오바마의 전략이 기본적으로 국내 문제에만 집중하는 축소(retrenchment)전략이었기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스티븐 월트(Walt 2017)는 정반대로 오바마가 기성 민주당내 자유패권파의 개입주의 논리에 포획되어 부시 정부시기와 유사하게 미국 예외주의에 기반한 무리한 해외팽창정책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평가
 - 오바마 정부의 대외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실패이유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분석이 제시됨 셈. 이는 패권화 강기에 진입한 미국의 대전략 수립에 있어 근본적인 딜레마를 함축적으로 예시. 즉, 현재의 미국은 과잉개입(over-reach)과 과소개입(under-

reach)이라는 양극단의 선택지 사이를 진동하며 새로운 지구적 세력분배에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Brands 2016: 118-119)

- 동시기에 미국의 정치학계에서는 대외전략의 진로를 둘러싼 대논쟁이 발발(이혜정 2015)
 - 한편에서는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억제(restraint), 축소(retrenchment),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등을 새로운 전략적 대안으로 주장하는 목소리들(Mearsheimer and Walt 2016)이 표출.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까지 현대미국외교에서 초당적 합의의 위치를 점해왔던 자유패권전략의 지속을 요구하는 입장들(Brooks, Ikenberry and Wohlforth 2013) 또한 제출
 - 미국권력의 상대적 약화와 지구세력균형의 변동이라는 구조적 조건이 학계에서도 미국대전략의 향방에 대한 기존의 컨센서스를 약화시키고 매우 상반된 대응책을 낳았던 것

3. 잭슨주의 전통과 트럼프 독트린

- 비합리적이고 즉흥적인 주장들의 나열에 불과하다는 일각의 비판들과 달리, 상당히 일관된 “트럼프 독트린”이란 것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트럼프는 2000년 개혁당 대선경선에 출마했던 시절부터 일련의 대외정책의 틀을 체계적으로 제시

가. 잭슨주의 독트린

- 최근 몇몇 학자들은 트럼프 안보전략의 대강을 이해할 수 있는 분석적 틀로서 미국외교의 오랜 전통 중 하나인 “잭슨주의(Jacksonianism)”¹⁾를 제시(Cha 2017; Lieven 2016; Mead 2017)
- 미국의 제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의 이름을 딴 이 이 단적 흐름은 건국기 프론티어의 개척민들에게서 유래하였으며, 반계몽주의적, 종교근본주의적, 쇼비니즘적 색채를 표출
 - 자유주의적-세속적-세계주의적 특성을 지녔던 동부의 지배계층과 달리, 서부의 “민중들”은 18세기부터 미국을 기독교를 믿는 백인들로 이루어진 배타적 인종-종교 공동체로 상상. 포폴리즘 전통은 이후 미국 정치사의 한 축을 구성하면서 자유주의적인 “미국적 신조(American Creed)”에 대항하는 대안적 정치비전을 제공
 - 특히 경제적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에 잭슨주의적 사회운동이 부상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산업화의 과정에서 배재된 농민들이 주축이 된 19세기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억제(restraint),
축소(retrench-
ment),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등을
새로운 전략적
대안으로 주장하는
목소리*

트럼프 현상은**기존에 주류적이지****않았던 지역(동서부****해안이 아닌****내륙지대 혹은****러스트 벨트)과****비자유주의적****사회세력이 부상하여****중앙정치무대를****장악한,****잭슨주의자들이****강성해진 상황을****대변**

말의 인민당(The People's Party)이 그 대표적인 예. 자본주의 고도화가 가져오는 사회 문제들에 맞서, 미국의 포퓰리즘 운동은 종종 기독교근본주의에 기반을 둔 반지성주의와 이민자들에 대한 인종주의적 공격을 해법으로 제시

- 트럼프 현상은 기존에 주류적이지 않았던 지역(동서부 해안이 아닌 내륙지대 혹은 러스트 벨트)과 비자유주의적 사회세력이 부상하여 중앙정치무대를 장악한, 미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잭슨주의자들이 강성해진 상황을 대변

○ 잭슨주의 외교전통의 특징들(Mead 2001: 218-263)

- 잭슨주의자들은 주류 미국외교정책 전통을 대표하는 윌슨주의와 해밀턴주의에 반대하는 이단적 존재. 즉,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치모델을 전 세계에 전파한다든지, 자유자본주의를 전 지구적 경제질서로 기획한다든지 하는 지구주의적 개혁과제에 무관심. 오히려 그러한 세계시민주의적, 자유국제주의적 프로젝트가 고유한 미국의 독립성과 특질을 위협하는 요소로 기능하지는 않는지에 대해 의심
- 유럽대륙의 현실주의 혹은 홉스적 국제정치이론과 유사한 세계관. 나라의 “안과 밖”의 경계(인종-종교적 공동체로서의 평화로운 내부와 위협하고 어두운 세계인 외부)를 명확히 나누고, 국가들 간의 끝없는 갈등과 국익추구를 강조
- 일정정도 내부지향적인, 국내 문제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지니는 동시에 미국의 순수성을 오염시킬 수 있는 국내외의 이질적 존재들(이민자, 공산주의자, 무슬림, 성적소수자 등등)에 대해서는 편집증적(paranoiac)인 반응 표출
- 소위 “불명예스러운” 적들에 대해 매우 호전적인 태도를 유지. 미국중심적인 관점에서 명예롭지 못한 특성을 지닌 (대개는 유색피부를 지닌) 타자들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적인 국제규범을 벗어나 철저한 응징과 무조건적인 승리를 추구. 역사적으로 19세기 아메리카 원주민들, 2차 대전기 일본, 그리고 오늘날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잭슨주의자들이 보인 태도는 이런 비자유주의적, 군사주의적 특징을 잘 표현
- 대외경제정책에 있어 개방경제가 아닌 경제적 민족주의를 고수하며, 토착주의(nativism)에 입각한 반이민 정책을 옹호

나. 트럼프의 세계전략

○ 트럼프의 외교정책론은 反주류적 잭슨주의 독트린에 착근

- 길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짧게는 탈냉전 시기를 주도해온 초당적 대외정책합의, 즉 자유국제주의적 정책이 만들어놓은 오늘날의 세계를

“끔찍한 실패(terrible mess)”라고 규정

- 이러한 혼란은 모두 기성의 “워싱턴 지배계급내의 내부자들”과 “소위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Trump 2015: 31). 양당의 기득권 정치인들이 “지구주의라는 거짓 노래”(Trump 2016a) 혹은 자유패권전략의 길로 민중을 오도한 결과가 바로 오늘날 미국의 쇠락이었다는 것이 트럼프의 진단
 - 트럼프 독트린 부상에 대한 외교정책가들의 비판이 당파를 초월해 전방위적이라는 사실은 트럼프의 외교정책이 그만큼 이단적인 전통에 기반해 있다는 점을 방증. 선거기간,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이 속한 정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내로라하는 외교전문가들이 집단 서명한 *반트럼프 공개서한*(Adelman et al. 2016)이 발표되었으며, 거의 반세기 동안 한 번도 특경대선후보를 선택한 적이 없는 『포린 폴리시』 저널이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클린턴 지지를 선언(The Editors of Foreign Policy 2016)했을 정도로 기성 안보분야 엘리트들의 반발은 초당적
- 오바마 행정부도 이미 “재균형” 전략을 통해 미국패권의 쇠퇴에 대처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의 지구적 세력균형에 대한 트럼프의 진단과 처방은 훨씬 더 급진적
- 트럼프는 미군의 해외진전배치를 철수시키는 포괄적 “축소”²⁾ 전략을 대안으로 제시.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될 수 없으며(Parker 2016), 따라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자신의 방위비를 분담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신을 방어해야만 할 것(Trump 2016a)
 - 세계평화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이라는 지배적 자유국제주의 노선일반, 그리고 그것의 군사주의적 버전인 네오콘의 정권교체 독트린을 “어리석음과 오만”의 산물이라고 비판하면서, 미국은 국가건설 업무(nation-building business)에서 벗어나 대신 세계의 안정창조에 복무할 것이란 점을 강조(Trump 2016a)
 - 원칙적으로 트럼프는 탈냉전기에 정점에 달했던 팽창주의적, 공격적 예외주의 대신 미국 예외주의의 19세기 판본인 “모범주의(exemplarism)”로의 회귀를 주창한 셈.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John Quincy Adams)의 오래된 격언을 따라 트럼프는 “세계는 우리가 적들을 찾아 해외로 나가지 않을 것이란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못 박았으며, “서구의 문명과 그 성과물을 강화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군사적 개입보다 더 세계에 긍정적인 개혁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Trump 2016a)
- 트럼프는 팩스 아메리카나의 중심토대로서 미국이 스스로 건설했던 전후의 주요 다자주의 제도들을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 안보 차원에서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수십 년 전의 필요

**“지구주의라는
거짓 노래” 혹은
자유패권 전략의 길로
민중을 오도한 결과가
바로 오늘날 미국의
쇠락이었다는 것이
트럼프의 진단**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의
외교정책의 핵심을
“힘을 통한 평화”라고
소개**

- 에 의해 만들어진 “낡은 것(obsolete)”으로 치부(Gove and Diekmann 2017). 코소보전쟁 직후인 2000년부터 이미 트럼프는 “유럽에서의 분쟁은 미국인의 인명을 희생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유럽으로부터 철수함으로써 매년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란 점을 강조(Applebaum 2016)
- 또한 트럼프는 동맹국에 대해 엄격한 상호성과 비용분담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동맹조약의 법적 의무를 경시. 가령 발트해 연안의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을 경우 그들을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트럼프는 “그들이 우리에게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나요? 그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할 때에만, 나의 대답은 예스입니다”라고 응수(Sanger and Haberman 2016). 국제연합(UN)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유엔이 민주주의와 자유의 친구가 아니며, 미국에게도 친구가 아니라고 언급(Begley 2016)
 - 경제적 차원에서도 트럼프는 다자주의와 개방시장경제의 정신에 반해 미국의 “경제독립선언”을 주창. 기성 정치인들이 추구해온 지구화는 미국의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시키고, 노동자들을 가난에 빠트렸을 뿐이며, 오로지 정치인들에게 기부하는 금융엘리트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을 따름(Trump 2016b). 따라서 이제부터 경제정책의 대안적인 원칙은 “미국제품을 사고 미국민을 고용하는 것(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Trump 2017)
 - 국익을 해치는 조항들로 미국경제의 주권과 자율성을 속박하는 세계무역기구(WTO)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은 모두 기존 내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최악의 협상물들로서 재협상 혹은 해체의 대상(Trump 2016c). 특히 선거기간 트럼프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이 미국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강간”을 의미한다고 극언(Hoffer and Cuetara 2016)
- “불명예스러운” 적에 대한 잭슨주의자들의 호전적 태도는 오늘날 이슬람 국가(IS)에 대한 트럼프의 매우 거친 수사들로 표현되는 군사주의적 해법으로 전수
- 선거기간 동안 트럼프는 근본주의 테러리스트들에 대해서는 고문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그들의 가족을 감금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전쟁과 관련한 기존의 자유주의적 규범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견지. 또한 對IS 전술로서 대량폭격을 통해 적들을 모조리 “날려버리겠다”는 해법을 제시(Cha 2016: 90)
 - 취임 직후 백악관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된 “아메리카 우선의 외교정책”에 대한 설명글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의 외교정책의 핵심을 “힘을 통한 평화”라고 소개. “공격적인 합동, 연합 군사작전”을 통해

이슬람 테러조직들을 패배시킬 것이며, 이론의 여지없는 세계군사패권을 유지할 것이란 점을 반복해서 강조(The White House 2017)

4. 동아시아: 지정학적 갈등의 도래?

- 대중국 봉쇄 혹은 견제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바마 행정부 시기부터 클린턴 국무장관의 주도 아래 “재균형”과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같은 담론으로 제기
 - 실제 국방정책에서도 오바마 정부는 전체적인 미국의 국방비 삭감과 군사력 감축이라는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에 기존 군사력을 유지하고 외교적 관심을 경주. 이는 사실상 해당지역에서 중국의 도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봉쇄정책을 실행한 것
 - 최근 부상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관련 논란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가능. 결국 한국 내 사드의 배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체계라는 한반도적 차원을 초과해 미국의 아시아중시 정책 내지 재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
- 문제는 트럼프의 잭슨주의적 접근이 오바마 행정부의 對中정책보다 더 갈등지향적일 가능성
 - 트럼프는 중국을 미국주도 세계질서의 틀 속에 포함시켜 안정되게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유자본주의국가로 변환시키려한 과거 클린턴 정권의 “관여와 확장(engagement and enlargement)”전략을 활용할 생각이 부재
 - 오바마 정부에도 계승되었던 자유국제주의 전략은 중국을 현존 국제질서에 참여시키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외부와의 상호의존증대가 미국경제, 나아가 세계경제 전반의 발전에도 이롭다고 판단
 - 그러나 트럼프는 중국의 2001년 WTO가입이라는 클린턴 정부의 성과를 도리어 재앙적 사태로 인식하고 있을뿐더러, 스스로 환율조작국이자,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목한 중국과 관세, 무역전쟁까지도 불사할 생각을 공개적으로 표명(Trump 2016b)
 - 또한 영토분쟁이 한창인 남중국해에 미해군의 군사력을 증강할 계획을 내비쳤고, 당선자 시절에는 오랜 관례를 깨고 차이잉원(蔡英文) 대만총통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중국이 사활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원칙”까지도 뒤흔들 수 있다는 입장을 암시(Nicholas and Beckett et al. 2017)³⁾

**문제는 트럼프의
잭슨주의적 접근이
오바마 행정부의
對中정책보다
더 갈등지향적일
가능성**

**미국의 교정책과
대전략 수립의
사회적 토대가
근본적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 향후 외부의 적에 비타협적인 미국의 잭슨민족주의 원칙과, 공산당 정권에 의해 의도적으로 동원되고 있으며, 이른바 “백년국耻(百年国耻)”에 대한 응징을 추구하는 중국의 민족주의가 맞부딪혔을 때, 매우 위험한 지정학적 충돌이 전개될 가능성 존재(Lieven 2012: 167-178)
- 특히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삼각동맹 對북중 동맹이라는 현실주의적 갈등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심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5. 결론: 미국발 자유세계질서의 위기?

- “중도의 몰락(dead center)”(Kupchan and Trubowitz 2013; 이해정 · 김대홍 2012) 논쟁은 자유국제주의라는 전후 국가적 합의의 대중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교정책과 대전략 수립의 사회적 토대가 근본적으로 양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노출
- 이러한 여건에서 2016년의 미국대선은 포스트-컨센서스의 시대에 어떠한 국가대전략이 새롭게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앞날을 이끌어갈지 여부를 가늠해보는 중대한 의미를 지녔던 선거
 - 클린턴이 기존의 가치, 즉 자유국제주의적 합의의 지속을 대표했다면, 트럼프는 그로부터의 이탈, 그리고 비자유주의적 포퓰리즘과 민족주의의 길을 제시
- 배리 아이켄그린(Eichengreen 2016)은 우리가 “초불확실성의 시대(The Age of Hyper-Uncertainty)”에 진입했다고 선언. 그리고 그 중심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이정표적 사건이 존재
 - 미국 국내정치 차원에서 보면, 국제주의로의 거대한 전환을 이끌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이후 70여 년 만에 기존 미국의 교정책노선을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대통령이 탄생(Mead 2017)
 - 국제정치적 차원에서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건설해온 자유세계 질서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변곡점에 도달. 이후 미국 내부정치, 주요 강대국 관계 등의 변수들과의 상호작용 속에 트럼프 대외정책의 향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미래의 세계정치는 커다란 변환기를 맞이할 가능성
 - 가뜩이나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 지구적 개입의지의 약화는 전간기와 같은 세계적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로의 진입을 야기할 것. 현실주의적 “지정학의 귀환”

(Mead 2014) 같이 기존 세계정치게임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도 실현가능

- 결론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자유세계질서의 변화방향을 이해하고 이에 면밀히 대응하는 국가적 노력이 요청되는 시점
 - 첫째, 미·중 간 갈등심화에 대한 장기적 대응이 요구. 양 강대국 중 어느 한쪽을 택하는 손쉬운 방식은 도리어 한국에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것. 2005년 “9.19 공동선언”에서 원칙적으로 합의된 동북아 다자협력기구 구상은 요원한 길이지만 여전히 역내의 민족주의적, 지정학적 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최종적 해법
 - 둘째, 한미동맹에서도 더 이상 기존처럼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전략적 동반자 형태의 협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 방위비 분담과 한미FTA 재협상 요구가 점증하는 가운데, 어떻게 주고받기식(transactional)의 교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
 - 셋째, 북미관계의 악화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잰순주의적 트럼프 정부에 의해 북한이 “불명예스러운” 적의 범주에 갇히게 되어, 양국 간 힘겨루기가 매우 위험스럽게 전개될 가능성 존재. 사실상 북핵 문제를 방지하는 효과를 발휘해온 기존의 대북접근 방식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는 것이 한국의 외교적 주도력(agency)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방향
 - 넷째, 장기적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의 물결이 전지구적으로 강화되는 시대에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대응 부재 시,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병리현상과 정치적 양극화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 따라서 1930년대 미국의 뉴딜에 버금가는 사회적 대타협과 경제운영전략에 대한 국가적 컨센서스 구축 노력이 촉구됨

**한미동맹에서도
더 이상 기존처럼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전략적 동반자 형태의
협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
어떻게 주고받기식
(transactional)의
교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

주석

- 1) 미국대외정책의 여러 전통들 중의 하나로서 “잭슨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대중화시킨 저자는 윌터 러셀 미드(Mead 1999)이다. 미드는 미국사학자 데이비드 하켓 피셔(Fischer 1989: 605-782)의 논지를 따라 잭슨주의의 역사적 원천으로서 18세기 펜실베이니아 변경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주해온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인들(Scots-Irish)의 하위집단문화를 들고 있다. 이미 아일랜드 식민화작업에서 호전적이고 배타적인 전통을 구성해온 에스닉 공동체가 대서양 횡단 후에도 유사한 문화를 유지하며 주류 자유주의 문화와 구분되는 별도의 이데올로기 체계를 아메리카 식민지 서부에 구축했다는 것이 주 논지이다.
- 2) 사실, 부시 행정부 시기까지만 해도 대외개입 철수론(retrenchment) 혹은 억지론(restraint)은 일부 현실주의자들이나 리버테리안들이 주장하는 소수담론에 불과했다. 물론 9/11테러 이후 공화당의 일방주의자들과 민주당의 다자주의자들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존재하기도 하였지만, 지금 시점에서 회고해보면 사실 그것은 초당적인 국제주의라는 대원칙상의 합의 내에서 발생한 정책실행 방법론 논쟁의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보수주의의 대표적 지성인 로버트 케이건(Robert Kagan)이 이번 대선에서 힐러리 후보를 지지했던 점은 그런 사실을 방증한다(Lieven 2016: 12).
- 3) 그러나 트럼프는 취임 후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통화에서 “하나의 중국원칙”을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해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였다(Phillips 2017).

참고문헌

- 이혜정. 2015. “자제 대 패권: 탈냉전기 미국 대전략의 이해.” 『한국정치연구』 24집 3호: 171-197.
- _____. 김대홍. 2012. “미국 정치의 양극화와 대외정책: ‘중도의 몰락(Dead Center)’ 논쟁의 이해.”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3집 2호: 91-122.
- Adelman, Ken et al. 2016. “Open Letter on Donald Trump from GOP National Security Leaders.” *War on the Rocks*, <http://warontherocks.com/2016/03/open-letter-on-donald-trump-from-gop-national-security-leaders/> (2017/03/07).
- Applebaum, Anne. 2016. “Is America Still the Leader of the Free World?”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global-opinions/under-president-trump-america-may-no-longer-lead-the-free-world/2016/11/09/921bbbbe-a67b-11e6-ba59-a7d93165c6d4_story.html?utm_term=.c885c3d23872 (2017/03/07).
- Bacevich, Andrew J. 2017. “The Age of Great Expectations and the Great Void: History After ‘the End of History’.” *Le Monde Diplomatique*, <https://mondediplo.com/openpage/the-age-of-great-expectations-and-the-great-void> (2017/03/07).
- Begley, Sarah. 2016. “Donald Trump’s Speech to AIPAC.” *Time*, <http://time.com/4267058/donald-trump-aipac-speech-transcript/> (2017/03/07).

- Blyth, Mark. 2016. "Global Trumpism: Why Trump's Victory Was 30 Years in the Making and Why It Won't Stop Here." *Foreign Affairs*,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2016-11-15/global-trumpism> (2017/03/07).
- Brands, Hal. 2016. "Barack Obama and the Dilemmas of American Grand Strategy." *The Washington Quarterly*, Vol.39, No.4: 101-125.
- Brooks, Stephen, G. Ikenberry, and William Wohlforth. 2013. "Lean Forward: In Defense of American Engagement." *Foreign Affairs*, Vol.92, No.1: 130-142.
- Cha, Taesuh. 2017. "The Return of Jacksonianism: The International Implications of the Trump Phenomenon." *The Washington Quarterly*, Vol.39, No.4: 83-97.
- Daalder, Ivo H., and James M. Lindsay. 2003. *America Unbound: The Bush Revolution in Foreign Polic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 Deudney, Daniel. 2007. *Bounding Power: Republican Security Theory from the Polis to the Global Vill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ueck, Colin. 2015. *The Obama Doctrine: American Grand Strategy Toda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ichengreen, Barry. 2016. "The Age of Hyper-Uncertainty,"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age-of-hyper-uncertainty-by-barry-eichengreen-2016-12> (2017/03/07).
- Fischer, David Hackett. 1989. *Albion's Seed: Four British Folkways in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ukuyama, Francis. 1992.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Harmondsworth.
- Goldberg, Jeffrey. 2016. "The Obama Doctrine." *The Atlantic Monthly*, Vol.317, No.3: 70-90.
- Gove, Michael, and Kai Diekmann. "Full Transcript of Interview with Donald Trump." *Time*, <http://www.thetimes.co.uk/article/full-transcript-of-interview-with-donald-trump-5d39sr09d> (2017/03/07).
- Hoffer, Jessica, and Ines De La Cuetara. 2016. "Donald Trump Slams Trans-Pacific Partnership as 'a Continuing Rape of Our Country'." *ABC News*, <http://abcnews.go.com/Politics/donald-trump-slams-trans-pacific-partnership-continuing-rape/story?id=40213090> (2017/03/07).
- Ikenberry, G. John. 2011. *Liberal Leviathan: The Origins, Crisis, and Transformation of the American World Ord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14. "Obama's Pragmatic Internationalism." *American Interest*, Vol.9, No.5, <http://www.the-american-interest.com/2014/04/08/obamas-pragmatic-internationalism/> (2017/03/07).
- Jervis, Robert. 2011. "Unipolarity: A Structural Perspective." G. John Ikenberry, Michael Mastanduno and William Curti Wohlforth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Consequences of Unipolar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hnson, Chalmers A. 2000. *Blowback: The Costs and Consequences of American Empire*. New York: Metropolitan Books.

- Kagan, Robert. 2012. *The World America Made*. New York: Alfred A. Knopf.
- Kupchan, Charles A., and Peter Trubowitz. 2013. "American Statecraft in an Era of Domestic Polarization." Rebekka Friedman, Kevork Oskanian and Ramon Pacheco Pardo (eds.). *After Liberalism?: The Future of Liberal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Lieven, Anatol. 2012. *America Right Or Wrong: An Anatomy of American Nation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16. "Clinton and Trump: Two Faces of American Nationalism." *Survival*, Vol.58, No.5: 7-22.
- Mead, Walter Russel. 1999. "The Jacksonian Tradition." *National Interest*, Vol.58, No. 5: 5-29.
- _____. 2001. *Special Providence: American Foreign Policy and How It Changed the World*. New York: Alfred A. Knopf.
- _____. 2014. "The Return of Geopolitics: The Revenge of Revisionist Powers." *Foreign Affairs*, Vol.93, No.3: 69-79.
- _____. 2017. "The Jacksonian Revolt: American Populism and the Liberal Order." *Foreign Affairs*, Vol.96, No.2: 2-7.
- Mearsheimer, John, and Stephen Walt. 2016. "The Case for Offshore Balancing: A Superior U.S. Grand Strategy." *Foreign Affairs*, Vol.95, No.4: 70-83.
- Nicholas, Peter, Paul Beckett, and Gerald F. Seib. 2017. "Trump Open to Shift on Russia Sanctions, 'One China' Policy." *The Wall Street Journal*, <https://www.wsj.com/articles/donald-trump-sets-a-bar-for-russia-and-china-1484360380> (2017/03/07).
- Obama, Barack. 2009. "Obama's Speech in Cairo." *The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2009/06/04/us/politics/04obama.text.html> (2017/03/07).
- Parker, Ashley. 2016. "Donald Trump Says NATO is 'Obsolete,' UN is 'Political Game'."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politics/first-draft/2016/04/02/donald-trump-tells-crowd-hed-be-fine-if-nato-broke-up/?_r=0 (2017/03/07).
- Phillips, Tom. 2017. "Trump Agrees to Support 'One China' Policy in Xi Jinping Call."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feb/10/donald-trump-agrees-support-one-china-policy-phone-call-xi-jinping> (2017/03/07).
- Polanyi, Karl. 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oston: Beacon Press.
- Posen, Barry R. 2014. *Restraint: A New Foundation for U.S. Grand Strateg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Sanger, David E., and Maggie Haberman. 2016. "Donald Trump on NATO, Turkey's Coup Attempt and the World."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16/07/22/us/politics/donald-trump-foreign-policy-interview.html?_r=0 (2017/03/07).
- Smith, Tony. 2012. *America's Mission: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wide Struggle for Democracy, Expanded Ed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he Editors of Foreign Policy. 2016. "Hillary Clinton for President of the United

- States.” *Foreign Policy*, <http://foreignpolicy.com/2016/10/09/foreign-policy-endors-hillary-clinton-for-president-of-the-united-states/> (2017/03/07).
- The White House. 2017. “America First Foreign Policy,” <https://www.whitehouse.gov/america-first-foreign-policy> (2017/03/07).
- Trump, Donald. 2015. *Crippled America: How to Make America Great Again*. New York: Threshold Editions.
- _____. 2016a. “Transcript: Donald Trump’s Foreign Policy Speech.”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16/04/28/us/politics/transcript-trump-foreign-policy.html?_r=0 (2017/03/07).
- _____. 2016b. “Declaring Economic Independence.” *Politico*, <http://www.politico.com/story/2016/06/full-transcript-trump-job-plan-speech-224891> (2017/03/07).
- _____. 2016c. “Republican Nomination Acceptance Speech,” https://assets.donaldjtrump.com/DJT_Acceptance_Speech.pdf (2017/03/07).
- _____. 2017. “The Inaugural Address,”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inaugural-address> (2017/03/07).
- Walt, Stephen. 2017. “Barack Obama Was a Foreign-Policy Failure.” *Foreign Policy*, <https://foreignpolicy.com/2017/01/18/barack-obama-was-a-foreign-policy-failure/> (2017/03/07).

❖ 저자 약력

■ 차태서

現 중앙대학교 국익연구소 전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2016년 미국 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The Construction of the American Standard of Civilization”을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주요 연구분야는 미국외교 정책, 국제정치이론이며, 주요 논문으로 “The Return of Jacksonianism: the International Implications of the Trump Phenomenon”(2017), “The Formation of American Exceptional Identities: A Three-Tier Model of the ‘Standard of Civilization’ in U.S. Foreign Policy”(2015), “American Exceptionalism at the Crossroads: Three Responses”(2015) 등이 있음.

목 차

1. 금융세계화, 지역금융 협력의 대두, 기로에 선 동아시아 금융협력
2.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제도적 발전 현황과 과제들
3. 동아시아 금융협력 재도약을 위한 한국의 금융외교
4. 한-중-일 관계 회복을 위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합의와 상징성

**신자유주의 경제운영
원리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세 가지 흐름을
창출**

변환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기로에 선 동아시아 지역금융협력의 현재와 미래

이용욱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금융세계화, 지역금융협력의 대두, 기로에 선 동아시아 금융협력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래 지속되어온 신자유주의 경제운영원리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세 가지 흐름을 창출하였음(이용욱 2015, 262-263)
 - 첫째, 무역, 금융, 투자, 통화의 탈국경화(자유화, 민영화)에 따른 국가경제 간의 민감성과 취약성의 확대
 - 둘째, 빈번한 금융위기의 발생(1982년 8월 남미 부채 위기; 1990년대 초 북유럽 금융위기; 1992~1993년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통화위기; 1994~1995년 멕시코 폐소화 위기; 1997~19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2008 미국발 금융위기; 2010년 유럽 국가부채 위기 등)
 - 셋째, 이러한 금융위기의 대응방안으로 지역금융안전망의 출현. 이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인 IMF와는 별도로 지역 차원에서 금융위기 예방과 금융위기 시 금융위기 관리와 신속한 긴급구제금융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음
- 지역별 금융안전망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유럽의 경우, 2010년 유럽 국가부채 위기를 계기로 유럽금융안정 기금(EFSF: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을 발족시켰으며, 이것이 확대되어 유럽안정메커니즘(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으로 발전하였음¹⁾
 - 2017년 3월 독일 재무장관인 볼프강 쇼벨(Wolfgang Schäuble)이 기존의 ESM의 기능을 확대한 유럽통화기금(European Monetary Fund)의 출범을 제안하면서 유럽은 본격적으로 독립적인 자체지역금융안전망 구상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 중동에서는 1976년 아랍통화기금(AMF: Arab Monetary Fund)을 출범 시킴
 - 남미에서는 1978년에 출범한 ‘안데스 저축기금(Andean Reserve Fund)’

에 이어, 1989년부터 ‘라틴저축기금(FLAR: Latin American Reserve Fund_Fondo Latinoamericano de Reservas)’이 작동 중에 있음

- 동아시아에서는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직간접적으로 함께 경험한 아세안+3를 중심으로 1998년 이후 금융협력을 지속하여 왔는데 2000년 출범하여 2010년에 다자화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및 2002년 시작된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등이 제도적 협력의 주요 결과물로 등장²⁾
- 2013년 이후 G20과 IMF의 주도로 글로벌과 지역 차원의 금융안전망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최상위 포럼으로 G20이 출범. G20은 출범 초기 그 핵심 역할을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방지 방안 마련과 이와 관련된 금융규제 개혁 등으로 제시하였음
 - G20 정책공조의 틀 안에서 IMF는 2013년 이후로 글로벌 금융안전망인 IMF와 지역금융안전망들 간의 협력 담론을 제시하며 추진하여 왔음
 - IMF가 지역금융안전망들과의 정책공조를 추진하는 이유는 금융위기 예방과 대처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에 있지만, 지역금융안전망들의 등장이 가져올 IMF 위상 축소의 위기의식과도 관련이 있음
 - 다시 말해, IMF 입장에서는 IMF가 주도하여 글로벌과 지역 차원의 금융안전망 협력의 구도를 고안하여 선점하는 것이 향후 IMF의 입지도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글로벌과 지역 차원의 금융안전망 정책공조는 역설적으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당위성과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주지하다시피 동아시아 금융협력은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통해 독자적인 전략, 즉 IMF의 구속에서 벗어난 역내 금융안전망(CMIM)의 필요성과 역내 자본시장 발전(ABMI)을 통한 안정적인 자본의 공급과 흐름을 목표로 하여왔음
 - 동아시아의 입장에서도 IMF와의 정책공조는 필요하지만, 현시점에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수준을 볼 때 IMF와의 정책공조는 그 조건과 구조에 따라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음
 - 양날의 검이 함축하는 부정적인 가능성은 다름 아닌 동아시아의 금융협력이 결국 IMF의 주니어 파트너가 되어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
 - 자세히 후술하겠지만, 아세안+3은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인 금융협력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역내 금융협력의 제도적 발전을 이루어냈으나 아직 독립적인 역량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단적인 예로 역내금융안전망인 CMIM의 IMF 연계비율을 들 수 있음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수준을 볼 때 IMF와의 정책공조는 그 조건과 구조에 따라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음

한국은 내년인

2018년 5월

아세안+3**재무장관 회의의****공동 의장국으로서****동아시아 금융협력의****역량강화를 선도할****기회를 확보**

- 현재 CMIM의 IMF 연계비율은 70%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동아시아 역내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CMIM이 IMF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긴급구제금융의 규모가 CMIM 총 준비자산의 30%라는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아세안+3이 IMF와의 정책 공조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협력의 패턴을 견인하는 것은 쉽지 않음
 - 동아시아 금융협력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IMF의 대안으로서 지난 20여 년간 아세안+3의 포맷으로 발전해 왔으나, 이제 다시 IMF 주도의 글로벌 안전망에 편입되는 역설에 봉착할 수 있음
 - 따라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역량강화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요청됨
- 2018년 아세안+3 회의는 한국 금융외교의 기회이자 도전
 - 한국은 내년인 2018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의 공동 의장국으로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역량강화를 선도할 기회를 확보
 - 특히 아세안+3가 2010년에 합의된 CMIM 협정문을 처음으로 정기 점검하고 2018년 회의에서 개정하기로 하여 2018년 회의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이 공동의장국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따라 전술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당위성과 기능성의 향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2.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제도적 발전 현황과 과제들

- 동아시아 역내 금융협력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Grimes 2009)
 - 먼저 CMIM인데, CMIM은 동아시아 역내 금융위기 예방과 금융위기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위기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다음으로 ABMI를 들 수 있는데, ABMI는 역내 자본시장발전 방안으로 동아시아가 해외자본과의 거래과정에서 겪는 이중 불일치(환율과 만기 불일치)를 완화하고 동아시아 자본시장을 발전시켜 동아시아 역내 자본이 역외로 유출되어 역내도 다시 환류하는 구조를 탈피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공동통화 구상인데, 이 논의는 2006년 시작하였으나 2010년 유럽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유로화체제의 문제점들로 인해 큰 진전 없이 사실상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 있음³⁾
- CMIM(CMI)의 제도적 발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아세안+3은 2000년 양자간 스왑 협정을 기초로 한 CMI를 출범시켰는데 총 스왑 규모는 170억 달러였으며, 이후 양자 스왑 규모는 계속 확대되어 CMI가 다자화되기 직전인 2009년에는 900억 달러에 달하였음
- CMI의 최초 IMF 비연계 비율은 10%에 불과하였는데, 2005년 20%로, 2012년 30%로 증가한 이후 현재까지 30%로 변화가 없음⁴⁾
- 아세안+3은 CMI 다자화에 대한 논의를 2006년 연례 재무장관 회의에서 시작하여 2007년 일본 교토 회의에서 다자화에 방점을 둔 “포스트 치앙마이 구상”을 내놓으며 구체화한 이후 2009년에 인도네시아 발리 회의에서 CMI 다자화(CMIM)를 최종 합의한 바 있음⁵⁾
- 아세안+3은 CMIM의 운영을 위해 총 기금 규모(1,200억 달러; 2012년 이후 2,400억 달러), 분담금 배분(일본, 중국 각 384억 달러, 아세안 238억 달러, 한국 194억 달러), 투표권 배분(일본, 중국, 아세안 각 28.4%, 한국 14.8%), 기금운영형태(분담금의 납입이 아닌 각 회원국 중앙은행에 분담액을 약속어음 방식으로 보관), 긴급구제금융 지원여부 의결방법(회원국의 3분의 2 찬성) 등의 합의를 이루어냈음(Lee 2015)
- CMIM은 공식적으로 2010년 3월 24일에 발효되었고, 2018년 협정문 정기점검과 개정을 앞두고 있음(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6년 12월 12일)
- 이와 함께, CMIM의 자매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ASEAN+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의 제도적 발전도 빼놓을 수 없음
- 아세안+3은 역내 거시경제 감시기능(Surveillance)과 CMIM의 원활한 작동(긴급구제금융 조건 등 구제금융 패키지 도출)을 돕기 위해 AMRO를 싱가포르에 설치하여 2011년 5월 출범시켰음
- AMRO는 CMIM체제에서 느슨한 형태로 운영되었던 기존의 거시감독 메커니즘인 “경제 및 정책 대화(ERPD: Economic Review and Policy Dialogue)”를 보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
- 아세안+3은 2013년 5월 AMRO를 국제기구화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회원국들의 국내 인준 과정을 거쳐 AMRO는 2016년 3월 국제기구로 정식 발족하였음
- 이에 따라 AMRO는 동아시아에서 역사상 최초로 금융부문에서 국제기구 지위를 가진 지역협의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음
- CMIM의 IMF 비연계 비중 확대에 있어 AMRO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아세안+3은 2000년 CMI의 출범 당시부터 CMI의 IMF 연계비중에 관해 회원국들 간에 이견이 있었는데 이는 IMF 연계비중을 역내 지역경제 감시기구의 발전에 따라 줄이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임

*CMIM의 IMF 비연계
비중 확대에 있어
AMRO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50% 비연계 비중은
CMIM의 독자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숫자”이기도 하지만
아세안+3이
금융위기 시
활용할 수 있는
독자적 가용자산의
확대를 기능적으로
의미하는 것**

- ABMI의 제도적 발전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아세안+3은 2003년 8월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ABMI를 동아시아 금융 협력 사업으로 채택하였는데, 전술한 대로 ABMI는 동아시아 역내 지역통화기반 채권시장을 활성화시켜 동아시아의 역외금융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으로 구상되었음
 - 한국은 ABMI의 출범과 이후 제도적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2002년 11월 도쿄에서 열린 재무차관 회의에서 최초로 ABMI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어 2003년 2월에는 증권화와 신용보강을 대개로 아시아채권시장을 발전시키자는 내용의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는 등 ABMI 출범의 초석을 마련하였음
 - 2003년 발족 이후 ABMI는 2005년 ABMI 로드맵(Roadmap), 2008년 ABMI 새로운 로드맵(New Roadmap), 2012년 새로운 로드맵 플러스(New Roadmap Plus), 2016년 중장기 로드맵을 거치며 변환하는 국제금융시장 환경과 회원 각국의 금융시장 상황 등에 영향을 받으며 제도적으로 진화해 왔음
 - 아세안+3은 또한 아시아채권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진행해 오고 있음
 - 역내발행채권의 신용보증기구인 신용보증투자지구(CGIF: Credit Guarantee Investment Facility)가 2011년 출범되었고, 현재 7억 달러인 CGIF의 자본금 확대가 논의 중임⁶⁾
 - 아세안+3은 2009년 이후 원활한 채권거래와 거래 모니터링을 도와주는 ‘역내 예탁결제기구(RSI: Regional Settlement Intermediary)’의 설립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2013년 “Cross-border Settlement Infrastructure Forum(CSIF)”을 신설하였음⁷⁾
 - 마지막으로, 아세안+3은 아시아채권 표준규범 마련을 위해 2010년 9월 도쿄에서 아시아채권시장포럼(ABMF: ASEAN+3 Bond Market Forum)을 출범시켰는데, 역내 채권거래와 규제의 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ABMI 산하 포럼으로서, “ASEAN+3 Multi-currency Bond Issuance Framework (AMBIF)”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 CMIM과 ABMI의 향후 중단기적 과제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2018년 협정문 개정을 앞둔 CMIM의 경우, 개혁 과제의 핵심은 CMIM의 IMF 비연계 비중의 확대임
 - 현재 비연계 비중인 30%를 2018년에는 50%로 높이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50% 비연계 비중은 CMIM의 독자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숫자”이기도 하지만 아세안+3이 금융위기 시 활용할 수 있는 독자적 가용자산의 확대를 기능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함

- 2017년에는 아세안+3이 비록 40%로의 비연계 비중 확대마저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비연계 비중 확대에는 상당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2018년 CMIM 협정문 최초 개정이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관철시킬 필요가 있음
- CMIM의 50% IMF 비연계 비중은 향후 아세안+3이 IMF와 글로벌 금융안전망 정책협력 논의를 진행할 때 아세안+3의 입지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CMIM의 기금운영형태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현재 CMIM 기금은 납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원 각국이 분담금을 자국 중앙은행에 약속어음 형태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 시 신속하게 투입될 준비자산이 부재함
- 따라서 CMIM의 기금운영이 선납기금(Paid-in Funding)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금융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임(박영준 2014)
- 현재 세계 각 지역에서 운영되는 지역금융안전망들 중 선납기금을 갖추지 못한 것은 CMIM이 유일함
- 가령 유럽의 ESM은 총 펀드 규모가 5,000억 유로이며 이 중 약 800억 유로가 납입되어 있음
- 2012년 2,400억 달러로 확충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인 CMIM의 기금 규모도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세안+3의 경제 규모에 비해 2,400억 달러는 충분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지만 CMIM의 IMF 연계 비율은 더더욱 CMIM의 유동성을 제한하고 있음
- 또한 아세안+3은 CMIM의 발동절차, 실행 조건 등을 AMRO와 협력하여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금융위기 시 CMIM과 IMF의 협력방식이 “선 CMIM 독자적 지원, 후 IMF 연계지원(추가 소요 발생 시)”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례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AMRO의 경우 AMRO가 역내 거시경제 감시기능 강화와 CMIM의 원활한 작동을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의 확대와 연구역량 강화가 요구됨
- 특히 AMRO의 존재 목적이 IMF와 경쟁할 수 있는 거시경제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아시아 경제의 특수성에 기반한 독자적인 거시경제 평가방법을 고안하는 것이라고 볼 때 AMRO의 역량강화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향방과도 직결됨
- 장기적으로 AMRO를 CMIM의 사무국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Kawai 2014)

**AMRO의 존재 목적이
IMF와 경쟁할 수 있는
거시경제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아시아 경제의
특수성에 기반한
독자적인
거시경제 평가방법을
고안하는 것**

다음의 세 가지

외교적 노력: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대한 “공동주인의식 (We-Ownership),”

잠재적 수원국을 향한

“도덕적 해이 담론”

의 성찰적 맥락화

(Reflexive Contextualization)와

회원국 간 신뢰 제고,

다른 지역의

금융협력에

모델로 제시될 수

있다는 비전을 공유

- ABMI의 경우 전술한 아시아채권시장 인프라 구축을 완결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향후 CGIF의 보강, RSI의 출범, ABMF를 통한 역내 채권시장 규범 표준화 등이 필요함
- 특히 가장 진통을 겪고 있는 채권시장 규범 표준화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합의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됨
- 한일 양국은 다소간의 이견이 있는데, 한국의 경우 다양한 발행구조를 포괄하는 공통시장을 추구하고 있고 일본은 도쿄 Pro-Bond Market을 기반으로 한 아세안+3 통합시장의 구조화를 선호하고 있음
- 한국은 더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한국과 견해가 비슷한 아세안, 중국과 함께 일본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3. 동아시아 금융협력 재도약을 위한 한국의 금융외교

- 한국 금융외교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을 어떻게 재도약시킬 수 있을 것인가?
 - 전술한 대로 동아시아 금융협력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음
 - IMF 주도의 글로벌과 지역금융안전망 협력과는 별도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제도적 발전은 사실상 2011~2012년 이후에는 정체되어 있음
 - 위에서 논의한 바대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양대 축인 CMIM과 ABMI 모두에서 2012년경을 기점으로 눈에 띄는 제도적 변화가 없음
 -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중단기적 과제를 풀기 위한 한국 금융외교의 정책방향으로 본 보고서는 다음의 세 가지 외교적 노력을 제시함(전술한 중단기 과제에 대한 기술적 내용은 다루지 않음)
 - 첫째,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대한 “공동주인의식(We-Ownership)” 확립
 - 둘째,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있어 간헐적이지만 잠재적 수원국을 향한 “도덕적 해이 담론”의 성찰적 맥락화(Reflexive Contextualization)와 회원국 간 신뢰 제고를 도모하는 외교
 - 셋째, 동아시아 금융협력이 “제도적 생존”을 넘어 다른 지역의 금융협력에 모델로 제시될 수 있다는 비전을 공유하게 하는 것
- 공동주인의식 확립
 - 공동주인의식 확립 외교의 핵심은 회원국 간(특히 중국과 일본의) 리더십 경쟁을 선순환하여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것임
 - 다자제도 구축과 운영에 있어 리더십 경쟁은 서로 연관되지만 성격이 다른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함

- 하나는 다자제도의 발전을 공유하는 틀 속에서 벌어지는 지배와 주도권 확보를 위한 리더십 경쟁이고, 다른 하나는 경쟁국의 주요 이니셔티브를 방해하는 리더십 경쟁으로서 다자제도 자체의 효용성에도 상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임(Choi 2013)
 - 이 중 후자가 지난 5년여간 동아시아 금융협력에서 관찰되어지는 중국과 일본의 리더십 경쟁의 형태로 파악되는데, 장기화될 경우 동아시아 금융협력 자체가 표류될 가능성이 큼
 -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아세안도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대해 각기 다른 주인의식을 표출하고 있는데, 이는 바꾸어 말하면 공동주인의식의 부재 때문임
 - 중국의 경우 동아시아 금융협력은 그 단초가 일본의 1997년 아시아통화기금 제안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대한 중국의 공헌과 지지를 제한함
 - 다시 말해,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원소유권은 일본에 있다는 것이 중국의 대체적인 견해임
 - 원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일본의 경우는 동아시아와 국제정치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부담이 큼
 -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동아시아 금융협력이 결국 중국 주도로 귀결되어 중국국기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일본은 고심하고 있음
 - 한편, 한국은 다양한 정책대안과 협상능력을 바탕으로 CMIM과 ABMI의 제도적 발전에 주도적으로 기여해 왔음
 - 따라서 동아시아 금융협력은 한국 금융외교가 규칙준수자(Rule-Taker)에서 규칙제정자(Rule-Shaper)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영역임(이용욱 2012; 2016; Cho 2014)
 - 아세안+3이라는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아세안 역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속도, 폭, 방향성 등에 아세안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를 원하고 있음
 - 아세안은 또한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있어 동북아 삼국(한국, 중국, 일본)의 의미 있는 파트너가 되기를 바라고 있음
 - 한국 금융외교의 과제는 “세계경제에서 동아시아 금융자율성 확보”라는 당초의 그랜드비전을 회복하여 “아세안+3 공동주인의식”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도덕적 해이 담론의 성찰적 맥락화와 회원국 간 신뢰 제고
- 한국 금융외교는 도덕적 해이 담론을 역내 금융협력의 장에서 성찰적으로 맥락화시켜야 함
 - 금융은 기본적으로 자본의 적자주체(채무자)와 흑자주체(채권자)가 권리와 의무를 매개로 하여 맺어진 관계성에 있음

**동아시아 금융협력은
한국 금융외교가
규칙준수자(Rule-
Taker)에서
규칙제정자(Rule-
Shaper)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영역**

회원국들이 향후**금융위기 시****CMIM을****사용할 수 있게****CMIM의 역량을****강화하는 것이****선결조건이지,****회원국들의****도덕적 해이****가능성을 거론하며****CMIM을****유명무실하게****만드는 것은****순서가 뒤바뀐 것**

-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의 불이행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존재함
- 도덕적 해이 문제는 금융위기 시 채무와 채권으로 맺어진 국가 간, 혹은 국가와 민간 금융기관 사이에도 표출되는 중요한 사안임
-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있어서도 이러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함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분담금 규모가 큰 국가들이 잠재적인 수원국인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를 거론하기도 함(가령 CMIM의 IMF 비연계 비중 확충이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가 있다)
-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 도덕적 해이의 강조는 회원국 간 상호신뢰를 떨어뜨려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재도약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그러나 경험적 사실에 비추어 보면 도덕적 해이 문제는 기실 생각만큼 크지 않음
- 먼저, 금융위기를 초래한 정부는 그 원인에 관계없이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의 금융위기(남미, 동아시아, 유럽)에서 증명되었음
- 다시 말해 각국 정부는 거시경제운영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며, 동아시아의 경우 1997년 이후 어느 정부도 금융위기를 초래할 만큼의 도덕적 해이에 노출되지 않았음
- 또한, 아세안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은 막대한 외환보유고 축적, 양자 통화스왑협정 등을 통해 스스로 금융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대안(즉 IMF나 CMIM 등 다자기구와는 별도로)을 마련해 두고 있음
- 따라서 회원국들이 향후 금융위기 시 CMIM을 사용할 수 있게 CMIM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선결조건이지, 회원국들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거론하며 CMIM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임
- 한국 금융외교는 도덕적 해이 담론의 성찰적 맥락화를 통해 회원국들 간의 신뢰를 제고하여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역량 결집을 도모해야 할 것임

○ 지역금융협력의 새로운 모델 제시

- 전술한 대로 글로벌 금융거버넌스는 중앙집권화와 지역화/분권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 CMIM(지역금융안전망)과 ABMI(지역자본시장 발전)의 조합인 동아시아 금융협력은 지역금융협력 중 최선두에 서 있음
- 가령 CMIM은 중동의 AMF나 남미의 FLAR보다 늦게 지역금융안전망으로 출범하였지만 규모나 AMRO 설립을 비롯한 제도화 측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으며, 지역금융안전망과 지역자본시장의 병행 발전 모델은 지역금융협력에 새로운 모델로 제시될 수 있음

- 최근 유럽은 CMIM보다 높은 수준의 지역금융안전망인 EMF 출범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동아시아 금융협력은 정체되면서 미래의 동아시아는 또다시 유럽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위치로 전락할 수 있음
- 한국은 아세안+3 회의 등에서 CMIM+ABMI 결합 모델의 글로벌 경쟁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회원국들로 하여금 “동아시아 모델 수출”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게 하는 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음

4. 한-중-일 관계 회복을 위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합의와 상징성

- 한-중-일 갈등 해결은 연성협력에서 시작하여야 하는가?
 - 한국은 그동안 한-중-일 갈등 해결을 위한 시작 방안으로 연성이슈 중심의 협력을 강조해 왔음
 - 안보, 역사, 영토 문제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동북아시아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비교적 합의가 쉬운 연성이슈인 원자력 안전, 재난 구호, 기후 및 환경변화 대응, 질병 대응, 사이버 테러, 녹색성장 등에서 대화와 협력을 시작해서 이를 기폭제 삼아 안보 현안 등의 경성이슈로 협력을 넓혀가자는 논리임
 - 그러니 이것은 연성이슈에서 협력이 가능하지 않다면 경성이슈 협력은 고려조차 될 수 없다는 논리적 허점을 가지고 있음
 - 일견 합리적이거나 과거의 경험과 이론적 통찰을 통해 검토해 보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확률적으로 쉽지 않음
 - 물론 정책의 실효성을 예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선부른 예단은 지양하여야 할 것임
- 연성협력의 한계는 무엇인가?
 - 국제정치의 역사를 볼 때 갈등과 대립으로 교착된 정부 간 협력이 연성이슈 협력을 전환의 시발점으로 마련될 수 있을까?
 - 다음의 세 가지 연유에서 연성이슈 발 관계회복과 협력은 쉽지 않을 것임
 - 첫째, 지구온난화, 기후, 환경 문제 등에서 보듯이 연성이슈가 합의하기 쉽다는 논리에 반하는 경험적 사례들이 적지 않음
 - 둘째, 유럽연합의 단초가 된 “석탄과 철강협력”을 연성이슈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유럽의 통합을 이끈 독일과 프랑스의 오랜 전쟁과 각축이 석탄과 철강의 획득에 있었다는 것을 상기해 보면 이는 결코 연성이슈에 대한 협력이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음

한국은
아세안+3 회의 등에서
CMIM+ABMI
결합 모델의
글로벌 경쟁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회원국들로 하여금
“동아시아 모델
수출”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게 하는
외교를 펼칠 필요

동아시아 금융협력은**경성이슈보다는****낮지만****연성이슈보다는****훨씬 큰 파급력을****가질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재난 구호, 질병 안전 등 전술한 연성이슈들은 이미 정부 간, 민간 차원에서 동아시아 역내 협력 필요성과 기초적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어 이들 연성이슈들이 협력의 “전환점”이라는 “촉발력”을 만들어 내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임(가령 한국이 녹색성장보다는 핵회의, G20 등을 주관하여 얻은 파생효과를 비교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이슈 자체의 성격보다는 각 이슈들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그 중요도에 있어 자리매김되어 왔는지에 주목하여야 할 것임
- “전환”의 “촉발제”로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상징성은 아래와 같다
- 이러한 견지에서 동아시아 금융협력은 경성이슈보다는 낮지만 연성이슈보다는 훨씬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음
 - 금융협력의 제도적 공고화는 매우 높은 수준의 거시경제조율과 협력을 상설화하는 것으로서 역내 국가 간 거시경제운용의 “제도적 맞물리기(Institutional Interlocking)”를 동반하기 때문임
 - 또한 미래에 CMIM이 동아시아통합기금(EAMF: East Asian Monetary Fund)으로 발전하게 되면 EAMF는 동아시아 협력과 통합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임
 - 중견국인 한국이 슈만 플랜과 같은 거대한 구상을 발표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음
 - 동아시아 금융협력처럼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협력에 정책적 힘을 쏟는 것이 정책목표의 실현성과 함께 결과의 구체성을 높일 수 있음

주석

- 1) 베르너 플랜을 기초로 한 유럽통화시스템과 유로화의 등장 역시 유럽 차원의 금융위기 해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Mourlon-Druol(2012) 참조.
- 2)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경우 1997년 9월 일본이 제안한 아시아통화기금(AMF: Asian Monetary Fund)이 단초가 되었다. 일본의 AMF 제안은 미국, 유럽, 중국 등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 1998년 ‘신미야자와 구상’을 거쳐 1999년 이래 ASEAN+3의 협력구조를 갖추고 발전해 왔다.
- 3) 동아시아 공동통화 구상은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하였는데 현재는 역내 환율조정 메커니즘 발족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수준에서 여러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유로화와 같은 제3의 공동통화 출현의 가능성보다는 중국 위안화가 사실상 동아시아 역내 지역통화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 4) 2017년 5월 ASEAN+3 연례 재무장관 회의에서 CMIM의 IMF 비연계 비율을 40%로 늘리는 것에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 5) CMI 다자화의 핵심은 양자 스왑을 넘어 단일공동펀드로 역내 금융안전망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CMI 작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가령 특정 국가가 금융위기를 직면했을 때 그 국가는 긴급구제금융을 얻기 위해 양자 스왑 협정을 맺은 국가들 모두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시켜야 해서 신속하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다자화는 단일공동펀드를 매개로 자금지원의 집단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Chey(2009) 참조.
- 6) 아세안+3은 최근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아시아국채의 적격담보 인정을 위한 연구포럼(APCF: Asian Prime Collateral Forum)”을 수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APCF는 CGIF의 신용보강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설계되었다. 다시 말해, ASEAN+3 국채 등의 적격담보 활용을 통해 아세안+3은 더욱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7) CSIF는 2014년 회의에서 RSI 단기실행 방안으로 일본 중앙은행과 홍콩 통화청 사이의 “증권자금결제연결망(CSD-RTGS Linkage)” 구축을 시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참고문헌

- 박영준. 2014. “동아시아 새로운 지역금융안전망 제안: 준비자산 유동성 공여제도.” 한국국제경제학회 제37회 하계정책포럼.
- 이용욱. 2012. “변환하는 세계금융질서와 한국의 선택: 지역과 글로벌의 다자주의 연계.” 『국가전략』 18권 3호: 5-34.
- _____. 2015. “경제위기, 지역협력의 제도화, 융합과정모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평화연구』 23권 1호: 261-294.
- _____. 2016. “한국의 증권국 금융외교: G20을 통해 본 가능성, 한계, 그리고 역할의 모색.” 『국가전략』 22권 2호: 61-94.

- Chey, Hyoung Kyu. 2009. "The Changing Political Dynamics of East Asian Financial Cooperation: The Chiang Mai Initiative." *Asian Survey* 49(3): 450-467.
- Cho, Youngwon. 2014. "South Korea and the Pitfalls of East Asian Monetary Regionalism: Do Neighbors Mean Neighborly Behavior?" *Pacific Focus* 29(1): 92-115.
- Choi, Ji Young. 2013. "East Asian Financial Regionalism and the Politics of Global Financial Governance: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Power in Global and Regional Governance." *Pacific Focus* 28(3): 411-434.
- Grimes, William. 2009. *Currency and Contest in East Asia: The Great Power Politics of Financial Region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Kawai, Masahiro. 2014. "Asian Monetary Integration: A Japanese Perspective." ADBI Working Paper No.475.
- Lee, Yong Wook. 2015. "Nonhegemonic or Hegemonic Cooperation? Institutional Evolution of East Asian Financial Regionalism."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3(1): 89-115.
- Mourlon-Druol, Emmanuel. 2012. *A Europe Made of Money: The Emergence of the European Monetary Syste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저자 약력

■ 이용욱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3년 미국 남가주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연구 분야는 구성주의 국제정치경제, 글로벌 금융과 통화 거버넌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금융외교 등이다. 주요 편저서로는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전략』(2014), 『국제정치학 방법론의 다원성』(2014), 『동아시아 금융지역주의의 정치경제』(2012), *China's Rise and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Hegemony or Community?*(2014), *The Japanese Challenge to the American Neoliberal World Order: Identity, Meaning, and Foreign Policy*(2008) 등이 있다. 동아시아 금융지역주의에 대한 단행본을 마무리 중에 있다.

러시아식 자유주의의 한계: 트럼프 등장 이후의 러시아 대외정책

정재원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목 차

1.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비판적 국제정치이론의 복권
 - 가. 주류 국제관계이론의 한계와 비판적 국제정치이론의 유용성
 - 나. 네오그람시안 국제정치경제학적 접근법에 근거한 국제관계 분석
 - 다.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세계자본주의체제로의 재편입과 (반)주변부화
2. 세계체제 내 러시아 자유주의의 발전의 특징과 한계
 - 가. 자유주의의 급진성과 필연적 변질, 그리고 모순적 공존
 - 나. 비서구/비중심부 체제전환기 국가들에서의 자유주의
 - 다. 러시아 자유주의와 국내/대외정치
3. 자유주의 패러다임적 접근의 한계
4. 대안적 지역협력의 모델 창출

1.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비판적 국제정치이론의 복권

가. 주류 국제관계이론의 한계와 비판적 국제정치이론의 유용성

-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두 이론 공히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질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옹호하고 있으며, 미국과 서구 중심의 현존하는 국제질서를 옹호하는 경향을 보임.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정치경제적 변화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신현실주의적 국제정치이론에 따르면, 과거 소련과 달리 러시아는 자본주의 붕괴론과 같은 역사 필연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일정한 세력균형하에서 미국과 국가이익을 공유하고 국제질서의 안정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함
 - 또한 신자유주의적 국제정치이론에 따르면, 러시아도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 적응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미국이 세력균형을 통한 역내질서 안정에 합의할 수 있고, 미국의 패권과 러시아의 도전이 갈등을 피하며 공존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서 기존의 주류 국제정치학 이론들로 설명되지 않는 현실들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주요 중심부 국가들에 의해 주도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등으로 인해 증폭되고 있는 전 지구적 불평등과 다양한 갈등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불가능함
- 따라서 현재 비판적 국제관계이론들에 대한 복권과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비판적 국제관계이론들은 국제세계의 분석에서 총체성을 고려하며 국제적 수준에서도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 특징을 가짐
 - 경제적 잉여의 수취 기제에서 정치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본주의체제의 역사적 특수성에 주목하는 비판적 국제관계이론에서는 총체성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볼 때 국제경제와 분리된 국제정치란 존재하지 않음

네오그람시주의**국제정치경제학****이론은****기존의 국제관계학이나****국제정치경제학이****사회적·정치적****질서의 비역사적****현실 이해에서****출발하고 있다고 비판**

- 특히 비판적 국제정치이론들은 미국적 국제관계학의 인식론인 실증주의를 비판하고 있는데, 상술했듯이 이러한 실증주의에 기반한 미국적 주류 국제관계학은 현실주의, 자유주의를 막론하고 미국의 세계 권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임
- 또한 비판적 국제정치이론들은 서구중심주의 혹은 오리엔탈리즘적 특징을 갖고 있는 주류 국제관계학이론에 대해 벗어나려는 시도를 통해 미국 및 서구 지배질서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취함
- 러시아를 비롯한 체제전환 국가들을 둘러싼 국제정치경제적 갈등을 분석해 보면 네오그람시주의나 세계체제론(Wallerstein 1979)과 같은 비판적 국제정치이론이 그 분석과 전망에 가장 적합한 틀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나. 네오그람시안 국제정치경제학적 접근법에 근거한 국제관계 분석

- 네오그람시안 국제정치경제학은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을 국제정치경제학에 확장 적용한 콕스(R. Cox)의 저작(Cox 1987)을 발전시키고 있는 일단의 국제정치경제학 연구자들로서 비엘러(A. Bieler), 모튼(A. Morton), 페일(K. van der Pijl) 등의 세계경제에 관한 최근 논의들을 가리킴
- 네오그람시안 국제정치경제학 이론은 세계질서는 헤게모니 국가가 나머지 국가들을 포섭하고 있는 형태로 국제정치경제의 질서를 설명하는데, 세계 헤게모니 질서를 해명하고 그것의 위기와 이동을 설명하는 이론임
- 네오그람시주의 국제정치경제학 이론은 기존의 국제관계학이나 국제정치경제학이 사회적·정치적 질서의 비역사적 현실 이해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음
 - 네오그람시주의 이론에 따르면, 생산을 둘러싼 집단들의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세력을 형성하기 때문에 생산은 일종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며, 생산의 사회적 관계는 권력관계, 생산조직, 생산물 분배 등의 세 가지 차원에서 형성됨
 -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는 생산을 기초로 국가-사회 복합체가 구성되고, 특수한 국가 형태는 사회세력의 특수한 구성과 상이한 역사블록에 기초하는데, 이때 역사적 블록은 헤게모니 계급이 종속적 계급을 통합하여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세력을 형성함
 - 바로 이러한 헤게모니 개념을 국제정치경제적 관계로까지 확장하여 지배적인 사회계급이 형성한 국가적 헤게모니가 외부로 확대되어 세계 헤게모니를 구성하며 이 과정에서 초국적 헤게모니가 등장함
 - 한편 헤게모니 세계질서는 헤게모니 국가의 특수한 국가형태를 반영

하는데, 그러한 국가 형태가 다른 국가에도 확산되어 세계적 차원의 수렴 현상이 일어남

-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미국 헤게모니하에서 신자유주의적 국가의 등장은 필연적이고, 이 과정 속에서 초국적·역사적 블록이 형성되어 국민국가의 경계선과 계급을 뛰어넘어 이해관계와 정체성을 통합하여 초국적 자본의 헤게모니가 형성될 조건을 창출하게 되는데, 초국적 자본가계급 분파는 다양한 국제기구, 국제금융기구 등을 통해 자신의 계급적 이익을 극대화하며 초국적 역사적 블록의 중심을 차지함
- 최근 비엘러와 모튼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의한 국가 성격의 변형과 민족자본과 초국적 자본의 이해관계 충돌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페일은 헤게모니 개념을 국민국가뿐 아니라 초민족적으로도 적용하여, 지구적으로 초민족 헤게모니 계급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들이 초민족기구들(IMF, 세계은행, OECD 등)뿐 아니라 사적 네트워크들(빌더버그 모임, 세계경제포럼, 삼각위원회 등)을 통해 지구적으로 헤게모니 블록을 형성하는 프로젝트를 개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 외에도 중심부 지역 국가 주도의 세계자본주의체제 속에서의 체제전환기 국가들의 세계자본주의체제 내로의 재편입과 그 구조 속에서의 지위 재편과 역할 재규정, 그리고 내부 분화 등은 세계체제론과 같은 비판적 국제정치 이론에 입각한 접근법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 주고 있음

다.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세계자본주의체제로의 재편입과 (반)주변부화

- 위계적으로 나뉘어 있는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현실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된 이후 말 그대로 공식적으로도 공간적 확대를 완성하기에 이룸
- 정치적으로는 동유럽 지역과 구소련 지역의 국가들이 확연하게 대조되는데, 구사회주의체제 국가들은 서구 중심부 국가들의 이해에 따라 시장을 매개로 한 철저한 분업구조가 형성되면서 중심-반주변-주변부로 변화, 분화되어 왔음
- 체제 붕괴 이후 중부와 동남부 유럽의 옛 사회주의 국가들 역시 세계자본주의체제로 재편입되는 과정 속에서 과거의 지위를 상실하고, 다시 원료 공급지와 같은 반 주변부 혹은 주변부 국가의 위치로 강제되었음. 특히 금융세계화 시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서구 금융자본으로의 종속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그에 따라 국가자율성이 크게 제약됨
- 서구 자본에 대한 종속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1990년대 이후 자동차, 제조업, 전자제품 등 중동부 유럽의 주요 산업들은 해외 자본이 소

*체제 붕괴 이후
중부와 동남부 유럽의
옛 사회주의
국가들 역시
세계자본주의체제로
재편입되는
과정 속에 ...
서구 금융자본으로의
종속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

사회주의**국제체제로부터****이탈하여 국민국가****형태로 복귀한 것처럼****보이는 과정은****한 국가 단위체의****자립화가 아니라****세계시장의 편입****형태로 나타났으며 ...**

유하게 되었음. 그러한 투자가 집중되는 산업은 경공업 분야로서, 서구의 초국적 기업 네트워크에 있어서 하청 관계에 입각한 초국적 노동 분업 구조로 재편되었고, 사회주의 시절 발전했던 중공업 부문은 몰락하게 됨

- 특히 국제금융자본은 IMF 등을 내세워 급격한 시장경제 도입은 물론 그를 위한 급진적인 구조조정을 강요했는데, 국유기업의 사유화를 통한기업의 사적 소유로의 전환은 자본시장과 노동시장 등을 창출하여 자신의 축적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금융자본은 사유화와 국제자본의 자유화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음
- 이 과정 속에서 서구 금융자본은 각국의 관료집단들과 결탁하여 사유화, 국채매입, 금융자금 도피 과정에서의 막대한 수수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었음

- 한편 체제전환 국가들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자본을 조달받고 있는 등 은행이 기업의 최대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서구 금융자본들은 1990년대 심각한 경제적 혼란 속에서도 각 국가의 은행 부문에 적극적인 자본 참여를 확대했음
 - 그 결과 현재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에서 거의 대부분의 은행들이 외국인 소유가 되었고, 해외 금융 자본의 유입을 일정 정도 통제해 온 러시아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국인 소유 은행 숫자는 적은 편이지만, 그 대신 국내 타 은행들보다 몇 배나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중요한 것은 은행은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데, 금융자본이 체제전환 국가의 은행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자본이 체제전환 국가들의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중요한 대규모 기업들의 경우 외국자본이 최대 지분을 획득하였고, 핵심적 산업들이 초국적 자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됨

- 이러한 시각에 입각해 본다면, 사회주의 국제체제로부터 이탈하여 국민국가 형태로 복귀한 것처럼 보이는 과정은 한 국가 단위체의 자립화가 아니라 세계시장의 편입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들 국가에서의 신자유주의화, 즉 자유화, 사유화, 탈규제, 노동유연화 과정은 곧 불균등한 세계자본주의 경쟁질서로의 종속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반 주변부 혹은 주변부로 전락한 중동부 유럽 및 구소련 지역 국가들에 있어서 서구 자본에게는 선별된 자본, 지역, 계급의 발전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역내 국가들 간의 불균등한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고, 계급, 지역, 민족 등 수많은 단위에서의 갈등과 분쟁을 낳고 있음
 - 가령, 다른 세계 지역 곳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권위주의 독재 국가라 하더라도 서구 국가들에게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경우 등 필요가 있을 경우 레짐 체인지에 나서지 않지만, 반대로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 등 에너지가 빈약한 국가들의 경우 지정학적으로 필요할 경우 색깔 혁명을 통해 레짐 체인지를 적극적으로 시도해 왔음

- 이러한 자본주의체제의 확산 속에서 더욱 노골화된 신자유주의는 세계자본주의체제의 (반)주변부에 대한 중심부 자본의 지배 혹은 선택적 편입을 더욱 강화하려 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음
-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유럽이라는 과거로의 복귀, 즉 비공산 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로의 복귀란 이제 무조건적으로 서구 경제에 의존했었던 공산주의 시대 이전의 주변부 자본주의 구조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었음
 -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일부 국가들은 비교적 역동적으로 발전하여 유럽의 주변부로 편입되고, 다른 어떤 국가들은 세계 체제의 주변부 혹은 반주변부로 분화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지역을 막론하고 이들 지역의 후진성이 중심부의 발전을 위한 조건으로 변화할 것은 자명했음
 - 그러나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민중들은 세계자본주의체제로의 재편입에 있어서의 종속적 지위도 마다하지 않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면서, 설사 유럽 자본주의의 주변부가 되더라도 서구의 일원이 되는 것이 러시아로의 종속보다 낫다고 판단해 왔음
 - 가령, 중부 유럽 국가인 폴란드, 체코, 헝가리는 물론 역사적으로 유럽 역사의 주변부였던 크로아티아 등 구 유고슬라비아 구성 공화국들,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남부 유럽 국가들, 그리고 심지어 조지아,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구성 공화국들 중 일부 국가들까지도 유럽 중심부의 공해 산업 이전처, 저렴한 숙련 노동력 공급처, 자원 및 식량 제공처로 전략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유럽으로의 복귀를 진행해 옴
 - 따라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곧 유럽으로의 통합을 위한 적극적 개방을 의미하는데, 미국과 서구가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져올 파국적 측면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공산주의 정권하에서의 경험에 극도로 부정적인 이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지배계급들뿐 아니라, 민중들조차 시장경제 혹은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일정 정도 받아들임
 - 특히 좌파적 대안이 없는 상황 속에서 중심부 지역 국가들에 의해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안타깝게도 그 틀 속에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개혁 및 개방정책을 추구해 온 것임
- 정치적으로도 당시 서구 국가들 역시 신자유주의 국가로 변모함으로써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민중들은 세계자본주의체제로의 재편입에 있어서 종속적 지위도 마다하지 않으며 ... 서구의 일원이 되는 것이 러시아로의 종속보다 낫다고 판단

유라시아**경제연합이라는****이름으로****러시아를 중심으로****내부에****막대한 자원과 노동력,****그리고 시장을****포함하는 경제권이****미국 중심의****헤게모니에****도전하는 영국**

신자유주의의 강제는 한층 더 자연스럽게 일어났는데, 유럽의 (반)주변 부로의 편입을 적극적으로 선택한 중동부 유럽은 물론 구소련 지역을 작은 주변부로 삼은 러시아 역시 전 지구적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주변부 자본주의의 특징을 보이게 됨

- 이러한 주변부 신자유주의적 특징을 갖는 구조는 이 지역에서 현재까지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유라시아 경제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내부에 막대한 자원과 노동력, 그리고 시장을 포함하는 경제권이 미국 중심의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형국 속에서 서구는 충동을 불사하며 군사적·경제적·문화적으로 동진을 멈추지 않고 있음(Laruelle 2008)

2. 세계체제 내 러시아 자유주의의 발전의 특징과 한계

가. 자유주의의 급진성과 필연적 변질, 그리고 모순적 공존

- 16~18세기에 걸쳐 서구 유럽에서 형성된 자유주의는 시민혁명을 통해 절대군주제와 봉건적 신분제 사회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근거한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한 진보적이고 역동적인 정치사회사상이었음
 - 그러나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자유주의 사상은 경제적 자유주의, 즉 자유시장주의와 결합되면서 자유주의는 시장과 자본의 논리로 변질되었고, 결국 권력과 자본가들을 위한 수구적 이념으로 전락하게 됨
 - 경제적 자유주의로 변질된 고전적 자유주의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정부의 역할 등을 강조하는 사회적 자유주의 사상들도 등장하였는데, 이러한 자유주의를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부르며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의 한 토대가 되기도 함
- 그러나 이러한 진보적 자유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에 기반한 서구에서 경제 위기가 시작되었던 1970년대부터 경제적 자유주의는 다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미국과 영국 등에서의 신보수주의적 권력과 결합해 고전적 자유주의보다 한층 더 강한 시장근본주의적 자유주의, 즉 신자유주의가 지배적 사상으로 등장하게 됨
 - 미국과 영국에 의해 추동된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과 국가들에서 정치와 경제, 사회 전 영역에서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

- 1990년대 말부터 확산해졌다는 일각에서의 주장인 ‘신자유주의 퇴조 현상’은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유럽연합체제의 위기 및 극우정치세력의 득세, 그리고 미국국익우선주의를 내세운 미국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으로 한층 더 확산해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임
- 이론상으로는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기능을 극대화하자는 사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안정적 집행을 위해서 지배계급이 국가를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현실
- 아울러 학자들의 이론적 구분과는 달리, 자유주의는 실제 현실에서는 정치와 경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별도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님

나. 비서구/비중심부 체제전환기 국가들에서의 자유주의

- 전근대적 사회였던 비서구 비중심부 저발전 지역 국가들에서 자유주의는 식민지 시대는 물론 포스트 식민지 시대에도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음
- 과거 공산당의 폭압적 지배로 인해 좌파적 대안이 왜곡되어진 이들 국가들에서는 자유주의적 의제들이 급진적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아 자유주의적 단체들이 저항 세력의 주축을 이루기도 함
-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특히 자유시장, 개방경제 등으로 상징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이념은 민중들에게 자연스럽게 서구적이고, 선진적이며, 심지어 역사진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음
- 체제전환 이후에도 지배정당의 역할에 더 익숙한 공산당 등 현실 사회주의 좌파 후신 세력들은 사회주의권 바깥에서 발달한 좌파적 의제들에는 물론 서구식 고전적 자유주의적 의제들에도 못 미치는 의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가령, ‘좌’의 이름으로 오랜 기간 억압적 지배에 익숙한 각국의 공산당 및 동유럽 및 구소련식 구좌파 세력들은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적으로 경도된 상황에서 권위주의에 무감각하고 서구에서 발달한 생태환경, 인권, 젠더, 소수자 문제 등에 대해 비판적임
- 최근 유럽연합 질서에 이미 편입된 국가들은 물론 러시아 등지에서도 안티 파시즘 운동이나 환경 운동, 반독재 운동 등에 아나키스트 등을 포함한 서구식 좌파 세력들이 등장하는 등 새로운 흐름들도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급진적 자유주의와 서구식 사회(민주)주의, 아나키즘 등이 혼란스럽게 발전하고 있음

*자유시장, 개방경제
등으로 상징되는
경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은
서구적이고
선진적이며 심지어
역사진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

서구에서**수백 년 동안에 걸쳐****이루어진 일들이****압축적·복합적으로****일어나는 현상에****더하여 자본주의의****경험도 없고,****자유주의적 가치가****제대로 실험되지도****못한 채****사회주의체제로****전환되었다가****다시 시장경제로****회귀하면서 여전히****자유 자본주의적****가치조차 제대로****완수되지 못한****단계에 있는****러시아의****특수한 현실**

- 가령 러시아 공산당과 같이 세계화 과정에서 중심부 국가와 자본이 러시아를 비롯한 중심부 외 지역에서 가하고 있는 불공평하고 부정적인 행위에 대한 분석은 날카롭지만, 자국의 안팎에서 자국에 의해 행해지는 유사하거나 더 잔혹한 행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무관심 혹은 아예 무지함

○ 이러한 상황에서 서구에서는 (신)좌파의 운동 영역이었던 환경, 여성, 반핵, 인권 등의 문제가 러시아에서는 자유주의자들의 핵심의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유주의자들의 행동은 급진적 성격을 갖고 있음

- 최근 구소련식 구좌파가 아닌 다양한 서구식 신좌파 정치세력들도 세를 확장하고 있고, 서구식 무정부주의 운동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유주의적 경향이 강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긴밀한 연대는 잘 이루어지지 않음

○ 권위주의 정부가 억압적인 통치를 행하고 있는 많은 비서구 (반)주변부 국가들에서는 종종 우파 민족주의 단체와 자유주의자들의 반독재 연합 혹은 우파 민족주의와 좌파 단체의 결합 등 서구 등 여타 선진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모순적인 연대도 이루어짐

- 2000년대 중후반 극심한 탄압을 받은 야당세력 연합 조직인 ‘다른 러시아’에는 옐친 시기 관료가 주도하는 정치세력, 유럽연합 가입을 주장하는 우파 세력, 자유주의적 시민사회단체, 언론인들에서부터 ‘민족 볼셰비키’와 같은 민족주의적 극좌파 조직까지 매우 상호모순적 세력들이 망라되어 있었음

- 서구에서 수백 년 동안에 걸쳐 이루어진 일들이 압축적·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더하여 자본주의의 경험도 없고, 자유주의적 가치가 제대로 실험되지도 못한 채 사회주의체제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시장경제로 회귀하면서 여전히 자유 자본주의적 가치조차 제대로 완수되지 못한 단계에 있는 러시아의 특수한 현실에 대한 이해 없는 논의는 무의미함

- 비록 유럽을 지향하고, 미국을 찬양하며, 서구의 지원을 노골적으로 받거나 신자유주의, 극우 민족주의적 이념이나 근본주의적 종교, 그리고 특정 지배엘리트층 저항의 이데올로기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중의 저항이 일어나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Billington 2004; Casula 2009)

다. 러시아 자유주의와 국내/대외정치

○ 사회주의 소련체제에 맞서 싸웠던 자유주의자들은 체제전환기에 접어

들면서 민족주의적 경향과 서구식 경제적 자유주의(신자유주의)적 경향으로 분화되기 시작함

- 다양한 형태의 자유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친서구적 경향과 동시에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구분이 불분명한 채 발전해 옴
 -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극소수의 재벌을 비롯한 부유층이 자유주의의 이름으로 형성되었는데, 이들이 사유화 과정에서 국가의 부를 독점함으로써 분배 정의를 막고, 탈세 등 각종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됨에 따라 일반 대중들에게 자유주의는 곧 부패와 부도덕의 의미로 각인됨
 -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인권, 사상과 언론,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가치들이 자유주의의 표상처럼 여겨진 탓에 그 자체로는 큰 반감은 없었지만, 권위주의가 강화되고 서구와의 갈등이 증폭됨에 따라 이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가 곧 러시아에 위협을 가하는 서구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으로 왜곡됨
- 소련 붕괴 이후 1990년대 자유주의 추구를 선언했던 옐친 정부는 대외 정치적으로는 친서구적 개방정책과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근본주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해 왔으나, 그 결과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서구 금융기구의 구조조정 강요와 그에 따른 심각한 사회경제적 후퇴였음
- 1996년 옐친의 재선 이후 극단적인 외부로부터 강제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거부했지만, 이미 러시아 사회는 자유화, 사유화, 거시경제안정화, 노동유연화 정책 등이 관철되면서 신자유주의화 과정에 놓이게 되었음
 - 점차로 국가가 자본을 통제하면서 개방정책에서 적극적 개입정책으로 선회하는 듯 보였던 대외경제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 역시 자유시장주의적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은 아니었음
- 2000년대 집권 초기 서구와의 관계 개선의 노력을 보였던 푸틴은 9.11 테러 이후 이라크 전쟁 이전까지 대외 정치경제관계에 있어서 기존 관료들에 비해 자유주의적 입장을 고수했었음
- 그러나 NATO의 동진과 EU의 확장 정책, 미국의 일방적 이라크 침공, MD 시스템 확대, 반러시아/친서구적 국제기구인 GUUAM 창설, 그리고 중앙아시아 석유가스를 확보하기 위한 소위 파이프라인 정치 등으로 인해 서구와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함
 - 무엇보다도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의 구소련 국가들에서의 소위 ‘색깔혁명’ 지원을 통한 반러/친미 혹은 친서구 정권 수립 및 탈러시아화 시도는 러시아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옴
 - 특히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두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서구의 대 러시아 비판논리 속에서 러시아는 점차로 이러한 자유주의적 가치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기 시작함

소위 색깔혁명 지원을 통한 반러/친미 혹은 친서구 정권 수립 및 탈러시아 시도는 러시아에게는 위협...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두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서구의 대 러시아 비판논리 속에서 러시아는 점차로 이러한 자유주의적 가치에 대해 강한 반발

체제전환기적**상황 속에서****자유주의는 마치****초기 자본주의****체제에서와 유사한****긍정적인 기능을****갖고 있으면서도****동시에****경제적 자유주의가****야기하는 자본가와****부유층들만의****부 축적의 자유로 인해****매우 모순적인 지지와****비판을 받고 ...**

- 2000년대 초중반 이후 점차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적 요소가 약해지면서 권위주의적 특징을 띠기 시작했으며, 경제적으로도 옐친 2기보다 훨씬 더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를 주도하는 소위 ‘국가자본주의’적 특징이 나타나게 됨

○ 이러한 정치, 경제적 후퇴로 인해 러시아 내 자유주의적 정치 사회 세력들은 강한 비판을 해 왔는데,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원내에 진입하지 못한 자유주의 정당들의 영향력이 한층 더 약화되면서 비전형적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이 대중적 지지를 얻기 시작함

-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일부는 유럽적 가치나 자유시장, 그리고 서구 대 자본가나 자국의 올리가르히(Oligarch: 과두재벌세력)들과의 친화성을 부정하지 못하다 보니 대도시 지식인층 외에는 다수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해 온 측면도 큼

- 결국 체제전환기적 상황 속에서 자유주의는 마치 초기 자본주의체제에서와 유사한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경제적 자유주의가 야기하는 자본가와 부유층들만의 부 축적의 자유로 인해 매우 모순적인 지지와 비판을 받고 있음

○ 정권의 탄압과 대중의 외면으로 인해 1990년대 중반 이후 우파 정치세력연합(SPS)이나 야블로코(Yabloko)로 상징되는 자유주의 정치 정당들은 원내 진출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되어 의미 있는 의회 내 정치세력으로 자리 잡지 못하게 되었음

○ 반면 자유주의 지식인들을 주축으로 하는 시민단체, 인권운동단체, 언론인, 인권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세력은 도시를 중심으로 꾸준한 지지를 받아 왔음

- 여기에는 야블로코, 우파세력연합, 그리고 최근 파르나스(PARNAS)와 같은 정치단체에서부터 메모리알, 헬싱키 그룹, 노바야 가제타 지, 시민지원위원회 등 다양한 조직들이 있음

○ 푸틴 2기 이후 부패 척결을 내세운 변호사인 세르게이 나발니(Sergei Nabal'nyi)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옐친 시기 총리이자 야당 지도자로 활동 중인 카시야노프가 주도하는 파르나스(PARNAS), 그리고 야블로코가 주요 자유주의 야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음(Hale 2004)

○ 대부분의 자유주의 세력들은 애국주의의 광풍 속에서도 크림 반도의 합병과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의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 등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해 왔음

- 강고한 권위주의 국가에서 자유주의자들은 푸틴 1기에 강력한 존재였던 ‘다른 러시아(Another Russia)’와 같이 일부 극좌파들과 민족주의 세력들까지 결합한 반정부조직을 지속적으로 구성해 왔으나, 내부 이견 등으로 효과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음
 - 많은 실패와 반목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민주연맹’, ‘우파활동당’ 등 다양한 자유주의세력들은 민족주의자들 및 좌파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정치세력들을 규합하여 반푸틴 전선으로 결합하여 반정부운동을 벌이기도 함

- 주목해야 하는 점은 푸틴을 옹호하는 그러나 대통령은 당에 속해 있지 않아 여당은 아닌 ‘권력 정당(party of power)’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적 의제들 중 대중영합적인 요소들을 종합화하여 탄력적으로 다양한 입장들을 도입, 선점함으로써 2000년대 이후에는 대중적 지지를 받게 되었다는 점임
 - 일반적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러시아 자본주의체제를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라고 칭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반하는 정책인 양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에서는 신자유주의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관철되고 있음을 간과한 주장임
 - 특히 비서구, 비중심부 지역 국가들 및 체제전환기 국가들의 경우 거의 예외 없이 국제금융기구들과 중심부 국가 및 자본의 압박하에 외부로부터의 강제된 신자유주의화가 진행되어 왔고, 부분적 갈등과 조정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강한 권위주의적 국가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왔다는 특징이 있음
 - 옐친 초기의 신자유주의식 급진 개혁정책 기조로 인해 사회는 이미 엄청난 변화를 겪었으며, 이후 자본에 대한 국가의 우위를 보였던 푸틴 정권 시기에도 분배적 측면이나 노동과 사회복지 영역 등 사회경제적 영역에서는 민영화나 시장화, 유연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러시아는 국내적으로도 명백하게 주변부적 국가 신자유주의(state neoliberalism)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음

- 그동안 러시아를 포함한 구소련 국가들에서의 변화에 대해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체제의 전환과는 유리되어 있는 체제전환기적 특성을 갖는 현상으로 간주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임
 - 또한 중국과 더불어 국제정치무대에서 서구와의 대립을 주도하는 주요 행위자인 것처럼 보여 온 러시아의 정치, 군사적 행보로 인해 세계 자본주의체제로의 재편입과 그에 따른 역할의 강제 등에 따른 분석이 부족했음
 - 나아가 최근의 자본주의의 전환(transformation)과의 접합성 속에서의

**푸틴을 옹호하는
‘권력정당(party of
power)’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적
의제들 중
대중영합적인
요소들을 종합하여
탄력적으로
다양한 입장들을
도입, 선점함으로써
2000년대 이후에는
대중적 지지를 받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당선 이후****미국의 급작스러운****대 러시아 친화정책****역시 근본적인****질적 변화와는****거리가 멀다**

분석, 특히 신자유주의와 금융세계화, 저성장시대라는 국제정치경제적 변화와의 연관성 속에서 나타난 러시아의 국내의 정치를 살펴보는 비판적 국제정치학적 관점이 필요함

3. 자유주의 패러다임적 접근의 한계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무장한 세계화 등으로 표현되며 세계 정치경제 질서를 지배해 왔던 기본 원리는 자본이 아닌 국가가 우위에 서서 국가주의나 민족주의, 보호무역주의 등을 내세우며 마치 (신)자유주의적 질서나 시장근본주의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원리에 입각한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질적인 변화를 가져 오지는 않음
 - 유럽에서 시작되어 미국 트럼프 집권으로 강화된 고립주의, 자국우선주의, 반신자유주의 노선의 천명으로 자유주의와 다자주의의 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표면적인 변화에 불과함
 - 더욱이 그러한 근본적 변화의 상징으로 보이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급작스러운 대 러시아 친화정책 역시 근본적인 질적 변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음
 - 결단코 미국은 그 어느 정당의 집권하에서도 그 어떤 대통령의 통치하에서도 러시아와 밀월관계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1972년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는 닉슨의 중국 방문 전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친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전략은 훗날에는 정반대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소련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한 적이 있었음
 - 공통의 적에 맞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동맹을 포함해 역사적으로 미국은 자신의 단일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상하는 새로운 패권 경쟁 대상 국가들을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게 만드는 전략하에서 행동해 왔으며, 현재 러시아에 대한 접근 역시 그러한 일관된 기조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음
 - 미국은 같은 중심부로서 큰 틀에서는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유럽은 허용할 수 있으나, 중국의 패권 도전을 강하게 억압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 외의 또 다른 패권 국가가 등장하는 것은 절대로 용인할 수가 없음
 - 특히 유라시아 연합을 구성하며 역내에 자체적으로 막대한 자원과 시장, 중요한 지정학적·지경학적 입지, 그리고 저임금 숙련 노동력을 보유한 유라시아 연합을 주도하는 러시아라는 또 다른 패권 도전 국가의 등장과 도전은 미국으로서는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음(Emre 2004; Akgul 2005; Laruelle 2008)

- 흥미로운 점은 미국은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상호보완적 관계로 얽혀 있어 물리적 충돌은 자제하는 데 비해, 경제적 관계가 약한 러시아와는 간접적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고 있음
- 일시적 친러시아정책으로 미국은 현 국면에서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 중국의 힘을 속으로는 크게 두려워하는 러시아를 부추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EU 견제 및 통제, IS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동은 물론 수니파·시아파를 막론하고 세계 곳곳에서의 이슬람 세력에 대한 약화를 위해서도 러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있는 것임
- 따라서 중동에서의 IS 사태의 해결, 궁극적으로는 이슬람 세력의 확장 저지라는 목표는 단기간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서로의 협력 관계는 일정 부분 지속될 것임
-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종결시키는 등 러시아의 급격한 부상을 방조하지는 않을 것이며, 기존 우방국들을 중심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영향력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 세계 여러 지역들에서의 갈등은 머지않아 다시 재현될 것으로 판단됨
- 러시아는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서구와 대아시아정책을 매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 표면적으로는 국가의 주도하에 대외적으로는 반미/반서구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동시에 정치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를 거부하거나 경제체제로서 자유시장경제나 자본주의체제 자체에 대한 반대는 커녕 정반대로 적극적인 행위자가 되려는 모습에 주목해야 함(Weigle 2000)
- 즉 세계자본주의체제 내 러시아의 위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심부 서구 국가들의 방해를 넘어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국제정치경제질서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
- 따라서 서구와의 대립 속에서 대내적으로는 극동개발부를 신설하고,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석유가스의 수출을 비서구지역으로 다변화하며,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하이조약기구 등 다양한 국제조직들을 통해 반서구적 입장을 강화하고 아시아중시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근본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Petrov 2005; Senderov 2009)
- 또한 러시아는 후발 국가로서 자유주의적 정치경제적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국가 주도적 자본주의의 불가피성과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임

중심부 서구 국가들의 방해를 넘어 도약하기 위해서는 ...
다양한 국제조직들을 통해 반서구적 입장을 강화하고 아시아중시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근본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세계자본주의체제를**주도하는****국가가 아닌****러시아로서는****극동과 시베리아 등****지역들의 개발이나****아태 지역과 유럽을****있는 유라시아****강대국으로서의****새로운 도약에 매진.**

...

다만 이를 국가가**주도한다 하더라도****경제적으로 자유주의적****질서를 거부하고****고립주의 혹은****자국우선주의와 같은****방향으로의****정책 변화는 불가능**

- 이는 역대 경제 관련 장관들의 퇴임 후 반정부 노선 참여와 2016년 울류카예프(Ulyukayev) 경제부장관 구속에서도 보여지듯 권위주의적 권력 내에서도 자유주의적 성향의 경제부처 관료들과의 부단한 노선투쟁 및 권력투쟁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임
- 국내 정치에서의 자유주의적 입장에 근거한 푸틴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러시아 자유주의 정치 및 경제 엘리트들의 고질적 병폐인 부패 등의 혐의로 처내되, 동시에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대외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러시아 대외정책의 특징이기도 함
- 즉 세계자본주의체제를 주도하는 국가가 아닌 러시아로서는 극동과 시베리아 등 지역들의 개발이나 아태 지역과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강대국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에 매진. 다만, 이를 국가가 주도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자유주의적 질서를 거부하고 고립주의 혹은 자국우선주의와 같은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는 불가능함

4. 대안적 지역협력의 모델 창출

- 향후 러시아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무기로 당분간 대립구도에 있는 서구와는 자유주의에 반하는 세계적 경향에 따라 움직이면서도 동시에 그 출구로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는 자유주의 원칙하에서의 협력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음
- 즉 미국과 유럽에서의 반러시아적 경향과 더불어 최근의 고립주의, 자국우선주의, 민족주의적 경향에 따라 러시아는 불가피하게 유사한 기초하 자유주의에 반하는 정책을 취하겠지만, 아시아는 물론 유라시아 지역, 나아가 역외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에서도 개발의 필요에 따라서는 서구 국가 자본들과도 적극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러시아식 자유주의는 러시아와 유라시아의 지정학적·지정학적 상황에 따라 얼핏 모순적인 두 가지의 정책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임
- 결론적으로 서구 국가들과도 대립 일변도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간극을 이용하거나 같은 서구 국가들 내에서도 국가별로 차별적인 대응을 통해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적 질서를 거부하지 않으면서 화해를 모색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극동 지역이 한층 더 한국 경제의 활로를 찾는 새로운 대안 지역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난 동방경제포럼에서 한국과 러시아 정상 간 회담이 개최됨

- 이 회담에서 한·유라시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 가스관과 전력망, 한반도중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등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에 대한 협의 채널 재개 및 공동연구 수행 합의, 극동 지역 인프라 사업 등에 3년간 20억 달러 규모의 극동 금융 이니셔티브 신설
- 특히 한·러 전력망 사업에 대한 사전 공동연구에 합의하고, 일본이 주도하는 몽골에서의 슈퍼 그리드 사업을 예시로, 몽골과 중국, 러시아를 잇는 전력망 건설을 강조함
- 그 외에도 이노프롬-2018 파트너국 참여,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구축, 동방경제포럼 행사 주관, 극동 금융협력 등 4개 양해각서(MOU)와 1개 협정 개정안에 합의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둠
-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도발로 인해 동북아 공영발전을 위한 다양한 남-북-러 공동사업이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해 온 기존의 대러시아외교정책의 기초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 또한 한국과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극동개발에 나설 경우 기존의 자국의 경제이의 중심 개발정책에서 벗어나 현지 주민의 삶의 터전과 환경을 보전하고 그들의 인권과 생존권과 복지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공존공영, 평화복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함
- 따라서 가스관이든 전력망이든 철도 연결 사업이든 간에 주변부에게 강요하는 기존의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위계적 개발 모델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개발협력의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일시적인 러시아의 아시아 중시정책에 근거한 경제협력 구조를 공고히 해야 함. 우리 정부는 향후 러시아의 정책 기초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틀을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많은 학자들의 희망과는 달리,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서구와의 관계 중심적 외교정책에서 벗어나고자 한 적이 없으며, 극동을 비롯한 아시아로의 근본적 외교정책 기초 변화를 도모한 적이 없음
 - 서구와의 관계 악화의 이유 외에도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발전 전망이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러시아 정부의 아시아 중시정책으로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으나, 아시아나 유라시아 지역으로 러시아 정치의 중심이 이동하는 등의 근본적 변화는 없을 것임

**아시아나
유라시아 지역으로
러시아 정치의 중심이
이동하는 등의
근본적 변화는
없을 것**

북방경제협력에**있어서****한국과의 협력이****해당 지역 주민의****삶의 질과 복리 향상에****실질적으로****기여할 수 있고,****해당 지역 생태환경을****보존하는****에너지 개발을 추구**

- 한편 중국의 일대일로정책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 구상이 상호 충돌할 가능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 국가가 주도하는 구상들로부터 발생하는 지정학적·지경학적 장점들이 서구 자본의 입장에서는 일정 정도의 협력의 공간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나타날 것임(Hunter 2004; Akgul 2005; Laruelle 2008).
- 따라서 구소련 유라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 사업은 금융이 아닌 실물 경제로의 자본의 흐름을 만들어 낼 것이 명확한데, 비록 이 지역 국가들이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개발과 발전 담론들에 취약하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러한 시기에 한국은 보다 진보적이고 상생 가능한 독자적 접근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음
 - 추상적인 다자협력 혹은 소지역주의 등의 개념보다는 그동안 국가 간 관계에서 간과되어 온 부분들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를 위해 그동안 러시아를 자원 다변화의 한 대상 국가로만 인식하거나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만 여겨왔던 기존의 대러시아정책 기초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정상적인 양국 간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기업 단위의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한 한국 기업의 문제인 한국 기업들의 현지 문화, 노동 조건, 노동자 무시 경향, 한국식 접대 문화 및 현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성범죄 발생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북방경제협력에 있어서 한국과의 협력이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복리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해당 지역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에너지 개발을 추구하며, 해당 지역을 넘어 타 러시아 지역에서도 서구의 기준 이상의 인권과 복지에 기반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국 측 당사자들의 근본적인 의식 개조가 필요함
 - 또한 현 정부에서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령 수퍼 그리드 사업과 같이 이러한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신재생 에너지 중심 수출 구조가 빈약한 현재의 러시아에게 있어서는 자국 국민의 복리가 아닌 수출을 위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환경파괴 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함

참고문헌

Akgul, Ersal. 2005. "Russian Foreign Policy and The Discourse of Eurasianism Rhetoric versus Reality." *A Thesis Submitted to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Sciences of Middle East Technical University*.

Billington, James H. 2004. *Russia in Search of Itself*. Baltimore and London: The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Boquerat, Gilles, and Frederic Grare. 2004. *India, China, Russia: Intricacies of an Asian Triangle*. Singapore: Marshall Cavendish Academic.
- Casula, Philipp, and Jeronim Perovic (eds.). 2009. *Identity and Politics During the Putin Presidency: The Foundations of Russia's Stability*. Stuttgart: Verlag.
- Clunan, Anne L. 2009. *The Social Construction of Russia's Resurgence: Aspiration, Identity, and Security Interest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Cox, R. 1987. *Production, Power and World Order: Social Forces in the Making of 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Davies, Howard, and D. Green. 2008. *Global Financial Regulation*. Cambridge: Polity.
- Erşen, Emre. 2004. "Neo-Eurasianism and Putin's 'Multipolarism' in Russian Foreign Policy." *Turkish Review of Eurasian Studies*, vol.4.
- Franklin, Simon, and Emma Widdis (eds.). 2004. *National Identity in Russian Culture: An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Gel'man, Vladimir, & Cameron Ross. 2010. *The Politics of Sub-National Authoritarianism in Russia*. Burlington: Ashgate Publishing Company.
- Gill, Stephen. 1991. *American Hegemony and the Trilateral Commiss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ll, Stephen (ed.). 1993. *Gramsci, Historical Material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le, Henry. E. 2004. "Yabloko and the Challenge of Building a Liberal Party in Russia." *Europe-Asia Studies*, vol.56, no.7.
- Hunter, Shireen (ed.). 2004. *Strategic Development in Eurasia After 11 September*. London: Frank Cass & Co.
- Ivanov, I. S. 2001. "The New Russian Identity." *The Washington Quarterly*, vol.24, no.3.
- Jackson, Nicole J. 2003. *Russian Foreign Policy and The CIS: Theories, Debates and Actions*. London: Routledge.
- Kassianova, Alla. 2001. "Russia: Still Open to the West? Evolution of the State Identity in the Foreign Policy and Security Discourse." *Europe-Asia Studies*, vol.53, no.6.
- Kegley, Jr., and W. Charles. 2001. *World Politics, Trend and Transformation*. Boston: Wadsworth.
- Kuchins, Andrew C., and Igor A. Zevelev. 2012. "Russian Foreign Policy: Continuity in Change." *The Washington Quarterly*, vol.35, no.1.
- Laruelle, Marlene. 2008. *Russian Eurasianism: An Ideology of Empir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 Laruelle, Marlene (ed.). 2009. *Russian Nationalism and the National Reassertion of Russia*. London: Routledge.
- Light, Margot. 2003. "In Search of an Identity: Russian Foreign Policy and the End

- of Ideology.”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and Transition Politics*, vol.19, no.3.
- Lipman, Maria, and Alexey Malashenko. 2013. “The End of An Era in EU-Russia Relations.” Carnegie Moscow Center.
- Panfilov, Oleg. 2005. *Putin and The Press: The Revival of Soviet-style Propaganda*. London: The Foreign Policy Centre.
- Petrov, Nikolai. 2005. “From Managed Democracy to Sovereign Democracy, Putin’s Regime Evolution in 2005.” *PONARS Policy Memo*, no.396.
- Polikkovskaya, Anna. 2004. *Putin’s Russia*. London: Harvill Press.
- Reich, Robert. 1989. *The Resurgent Liberal*. New York: Vintage B0 mmooks.
- Senderov, Valerii. 2009. “Neo-Eurasianism: Realities, Dangers, Prospects.” *Russian Politics and Law*, vol.47, no.1.
- Shirayev, Eric. 2010. *Russian Government and Politics*. Palgrave Macmillan: New York.
- Trubetzkoy, N. S. 1991. “The Russian Problem.” *The Legacy of Ghengis Khan and other Essays on Russia’s Identity*. Ann Arbor: Michigan Slavic Publication.
- Wallerstein, Immanuel. 1979.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ltz, Kenneth N. 2001.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 Weigle, Marcia. 2000. *A Russia’s Liberal Project: State-Society Relations in the Transition from Communism*. Pennsylvania: Pennsylvania University Press.

❖ 저자 약력

■ 정재원

現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 유라시아학과, 조교수.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사회학연구소 사회학 박사. 주요 저서로 『러시아 제국과 소비에트: 이념, 종교, 혁명』(공저, 2013), 『현대 러시아의 해부』(공저, 2014), 『5.18 민주화 운동의 국제적 비교와 시민의식』(공저, 2014),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공저, 2015), 『카프카스 역사와 지정학: 전쟁, 분쟁, 그리고 이념』(공저, 2016) 등이, 옮긴 책으로 『러시아를 움직이는 힘』(공역, 2013), 『뉴 레프트 리뷰』(공역, 2010; 2015) 등이 있음. 주요 논문으로, “비중심부 식민지 민족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의 혼재와 사회주의로의 진화: 중앙아시아에서의 타타르 개혁 운동의 탄생과 종말”, “중부·동남부 유럽 탈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사회민주주의 정치세력의 발전과 분화”, “러시아 시민사회의 변화: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와 권위주의 국가와의 관계”, “러시아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세계자본주의체제와 국가 신자유주의의 영향”, “중앙아시아, 신장 그리고 위구르 문제: 기회와 위기의 모순적 공존”, “주변부 이슬람 사회의 진보적 민족주의: 아제르바이잔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적 의의”, “타지키스탄 내전과 그 이후: 민족주의, 이슬람, 그리고 민주주의”, “러시아 극동 지방으로의 중국인 이주: 역사와 현황” 등 다수.

자유주의 이후의 지역주의: 브렉시트와 트럼프 등장 이후 지역주의의 과제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지역통합연구부장)

목 차

1. 들어가는 말
 - 가. 탈냉전 이후의 국제질서
 - 나. 국제자유주의의 위기
2. 국제정치에서 자유주의
 - 가. 국제정치에서 자유주의의 논리
 - 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발전
 - 다. 미국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전개와 위기
3. 지역주의의 동향
 - 가. 지역주의의 의미와 전개
 - 나. 자유주의와 지역주의의 연동 논리
4. 자유주의 이후의 국제질서
 - 가. 자유주의의 대체 혹은 발전
 - 나. 경쟁적 지역주의의 등장
5. 마무리: 정책의 방향 제언

1. 들어가는 말

가. 탈냉전 이후의 국제질서

○ 위기의 서막

- 탈냉전 이후 국제정치는 역사의 종언을 선언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 등으로 낙관적 미래를 예측(Fukuyama 1989; 2003). 냉전 종식은 신자유주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미래의 정치적·경제적 원칙과 실천 지침으로서의 자유주의가 당분간 중요한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
- 2001년 9/11을 시작으로 2004년 3월 마드리드 열차 역 공격, 2005년 7월 런던 지하철 폭탄 공격 등 새로운 안보 위협이 대두. 또한 2000년대 이후 조지아의 장미혁명(2003),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2004), 튀니지의 재스민혁명(2010~11), 이집트혁명(2011) 등 구(舊)소련 국가들 및 중동의 민주화 운동이 국내의 정치적 변화를 일부 이끌어 냈지만 시리아 사태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혁명이 민주주의 정부 수립에 실패
- 이들 국가에서의 사회적 소요 혹은 새 정부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과 불안은 유럽 등 주변지역으로 향하는 난민을 발생시킴. 이 과정에서 알 카에다/IS를 비롯한 극단이슬람주의(Jihadism)의 발호가 지속됨
- 유럽연합(EU)이 2003년에 내놓은 ‘세계전략보고(A Secure Europe in a Better World)’에 따르면, 탈냉전 이후 미국의 우세가 지속되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날 어떤 국가도 혼자서 자신의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선언(No single country is able to tackle today’s complex problems on its own)하여 미국 일방이 주도했던 정치 질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확인
- 2008년 미국 월가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는 당시까지 전 세계에서 미국이 주도했던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함. 반면 미국 중심의 경제질서와 경쟁에 나설 만큼의 잠재력을 지닌 중국의 새로운 부상이 주목 됨. 낙관주의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도래를 예견. 버거스틴(Fred Bergsten 2005), 퍼거슨

**탈냉전 후
지역주의
(regionalism)는
자유주의의 활성화와
더불어 범위가 보다
확대되어 왔으며
내용도 심화됨**

- (Niall Ferguson 2009) 등은 미국과 중국의 상호의존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G2 혹은 키메라(Chimerica)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공언
- 2014년 6월에는 ISIL(The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이 이슬람 극단 테러리즘 단체를 넘어 제정일치의 칼리파 국가를 선언하며 서구 패권에 대한 공세를 지속¹⁾
- IS의 정치적·군사적 공세 이후 시작된 중동발 난민 탈출 현상은 유럽의 이민자 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됨
- 지역주의의 강화
 - 탈냉전 후 지역주의(regionalism)는 자유주의의 활성화와 더불어 범위가 보다 확대되어 왔으며 내용도 심화됨. 지역주의의 대표적인 실천 기제를 보여준 유럽연합은 냉전기의 12개 회원국에서 2017년 28개 회원국으로 확대. 제도적·기능적 측면에서도 마스트리히트 조약(1993), 암스테르담 조약(1999), 니스 조약(2000) 리스본 조약(2009) 등으로 거듭나며 경제통합뿐 아니라 외교안보, 내무·사법 분야까지 역량과 권능을 심화

〈표 1〉 2016년 기준 지역별 협력 기구

지역	기구
아시아	동아시아 정상회의(동아시아 공동체·동아시아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동남아시아 국가연합(아세안+3),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걸프 협력회의,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대양주	태평양 제도 포럼·남태평양위원회·남태평양공동체 사무국
유럽	유럽 연합(EU), 유럽평의회, 북유럽 이사회·동방 파트너십, 유럽 자유무역연합(EFTA), 유럽경제지대(EEA), 중앙유럽 자유무역협정(CEFTA), 남동유럽 협력 프로세스(SEECP),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위한 구암 기구, 러시아-벨라루스 국가 연합, 비셰그라드 그룹
아프리카	아프리카 연합(AU), 프랑스-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중앙아프리카 경제공동체, 동아프리카 공동체,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 아랍 마그레브연합
지역 포괄	아랍 연맹(북아프리카-아라비아 반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아시아 일부 대양주 및 북중미 일부), 이베로 아메리카 정상회의(남미, 스페인, 포르투갈), 유럽 안보협력기구(북미, 유럽 및 구 동구권), 북대서양 조약기구(북아메리카-유럽), 독립국가연합(구소련 국가), 유라시아 경제연합(러시아 및 구소련 국가 일부),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상하이 협력기구(러시아, 중국 및 구 소련 국가 일부), 지중해 연합(유럽, 북아프리카 및 중동), 아시아-유럽정상회의(유럽 및 아시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미국, 유럽, 아시아 및 대양주)

- 한편, 탈냉전 이후 ‘지역간주의(inter-regionalism)’도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 예컨대 1996년 태국 방콕에서 처음 시작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는 처음에는 아시아와 유럽 26개 단위가 참여하는 회의(15개 EU 회원국 및 7개 아세안 회원국 그리고 중국, 일본, 한국, EU 집행위원회)였으나 2017년에는 아시아 21개국, 유럽 30개국 그리고 EU와 아세안 사무국 등 총 55개 단위가 참여하는 지역 간 협의체로 거듭남
-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 등 기능적 차원의 새로운 지역협력체의 창설이 모색되고 있음. 또한 2015년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아세안 경제공동체(AEC)가,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이 출범
- 2017년 기준으로 지역주의 혹은 지역 간 주의를 표방하는 제도(institutions)는 대략 <표 1>과 같음

나. 국제자유주의의 위기

○ 이 글의 배경과 전개 방향

- 2016년 5월의 브렉시트(Brexit), 같은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한 것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였음. 실제로 2017년 초반 국제경제에서 주목되는 두 가지 현상 역시 브렉시트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였음. 이들의 공통점은 특히 경제 분야에서 국익우선을 높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임
-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선언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슬로건을 고수하며 2017년 1월 23일 TPP 공식 탈퇴를 선언(The White House)
- 국제무역에서 자유주의를 지탱해 온 미국의 의지가 약화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후원하던 미국의 안보 책임감 역시 퇴보하고 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안보 현안에서 국가대 국가의 고강도 전면 전쟁에 대한 우려는 감소하는 대신, 테러리즘, 난민위기, 빈곤격차 증가, 사이버 공격, 인간안보 등 포괄적 안보 측면의 위기는 지속. 2016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국제질서에서의 책임감이 약화되는 반면 경제력에 의존한 중국의 정치력 확대, 러시아의 역할 강화 등 지정학적인 충돌 우려는 커지고 있음
- 브렉시트의 결정에서 보듯이 지역주의의 쇠퇴와 더불어 미국이 주도한 국제자유주의가 퇴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양산
- 2017년 제주포럼 ‘자유주의 위기 이후의 지역주의’ 패널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자유주의의 위기가 실현될 경우, 전후(戰後)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주의 위기가
실현될 경우,
전후(戰後)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무역질서의
변화뿐 아니라
개방성, 다자주의,
민주적 거버넌스 등
그동안 서구가
주도했던 정치적·
사회적 가치의
변화가 불가피*

인간은

**“자유롭기는 하지만,
두려움 및 지속적인
위험으로 가득 찬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며, 이는
대립이 아니라
생명, 자유, 자산의
상호보존을 위해서
사회를 결성할 것을
추구하거나 사회에
들어가기려 한다”**

국제무역질서의 변화뿐 아니라 개방성, 다자주의, 민주적 거버넌스 등 그동안 서구가 주도했던 정치적·사회적 가치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을 우려하였음

-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20세기 중반 이후 지탱되어 오던 미국 주도의 국제자유주의의 현실과 자유주의의 터전에서 기능적으로 발전되어 온 지역주의의 변화 방향이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의 대처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토론하는 것에 목적을 둠

2. 국제정치에서 자유주의

가. 국제정치에서 자유주의의 논리

- 로크적 가정: 경쟁과 제도
 - 국제관계에서 홉스의 논리가 무정부(anarchy) 상태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자구의 논리 즉, 행위자들이 가진 적대(enmity)를 기저로 하였다면, 로크는 적대가 아닌 경쟁(rivalry)을 기저로 함
 - 로크의 전제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기는 하지만, 두려움 및 지속적인 위험으로 가득 찬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며, 이는 대립이 아니라 생명, 자유, 자산의 상호보존을 위해서 사회를 결성할 것을 추구하거나 사회에 들어가려 한다”는 것임(Locke 2003)
 - 이와 관련하여 웬트(A. Wendt)는 로크가 홉스와 달리 적대가 아닌 경쟁에 기초한 내부화(internalization)작용을 하고 있는 것에 주목. 경쟁자들은 적대 개념과는 달리, 서로의 삶과 자유(life and liberty)를 인정해 주려고 하며 이는 행위적인 측면에서 서로의 주권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재현됨. 말하자면 경쟁자들은 상대를 정복하거나 지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Wendt 1999: 270) 이는 타자 인정의식으로 무정부 상태에서 자구책에 따라 상대를 무조건 굴복시켜야 한다는 홉스적 논의와는 다른 것임
 - 로크의 주장은 훗날 자유무역과 민주주의 이념 확산의 가능성으로 발전되었고 더불어 이 같은 가능성은 국제제도를 통해 국가 간 협력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근거를 생산함
 - 한편,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존 스튜어트 밀, 서병훈 역 2005: 32)고 선언
 - 로크와 밀의 맥락에서 보자면, 자유주의는 진정한 상호성(real reciprocity)

- 을 전제로 함. 이는 국제경제, 특히 무역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짐. 무역 당사자들은 거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익과 손실 간의 균형을 고려함. 이는 경제 활동 시에, 장기적 동학에 따라 산업 조정 혹은 손실 부분에 대해 조율하고 거시/미시 정책을 통해 적절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채택하는 것과 같음. 이런 자율 기능을 무시하거나 또는 시기적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을 경우, 필연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회 계층이 생기게 되며 그들의 불만은 쌓이게 됨(김세원 2017)
- 자유주의자(혹은 신제도주의자)들은, 경제적 상호의존은 전쟁이 발생함으로써 생기는 부담을 높이기 때문에, 합리성에 바탕을 둔 국가는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물론 이를 통한 경제적 상호의존으로 전쟁의 가능성을 낮춘다고 봄(Keohane & Nye 2001). 이때 법과 제도는 협력을 확신케 하는 기제가 됨
 - 국제정치는 국내정치와 달리 중앙집권화된 권위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들 간에 국제법이 유용한 규범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이 같은 논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 자력구제가 아닌 법과 제도에 따른 협력의 기대는 상업적 자유주의 및 공화적 자유주의의 발전 토대가 됨
 - 이는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과도 연계되는데, 이 논리에 따르면 자유주의 국가들(liberal states)들은 평화를 지향한다는 것임. 말하자면, 국민에게 정치적 선택이 자유롭게 주어진 민주국가에서는 국민들이 비용과 희생이 따르는 전쟁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Doyle 1986). 문제는 이러한 자유주의 국가들의 평화 지향을 확신시켜줄 담보물이 있어야 하는데 코헤인(Robert O. Keohane)과 같은 제도주의자들은 그것이 바로 ‘제도(institutions)’라고 봄

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발전

- 국제사회에서 자유주의의 초기 모습은 나폴레옹 전쟁 후 구체제로의 복귀와 상업적 자유주의 세력 간의 정치적 갈등 관계가 끊임없이 되풀이될 무렵에서 찾을 수 있음
- 자유당 출신으로 1830년 영국 외무성 장관을 시작으로 전쟁성 장관, 그리고 총리를 두 차례(1855~1858, 1859~1865) 지낸 파머스턴(Henry John Temple, 3rd Viscount Palmerston)의 정책은 바로 국가 차원에서 자유주의를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취한 사례임
- 영국은 유럽의 세력 균형이 파괴되지 않는 한에서 대륙의 자유주의 혁명(1830년의 프랑스 7월 혁명 및 벨기에 독립)을 지지하는 정책을 펼쳤음. 영국 정부는 1830년대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자유주의 운동 및 터키로부터 그리스의 독립을 지원하였고 중국과는 자유무역을 추진.

*자력구제가 아닌
법과 제도에 따른
협력의 기대는
상업적 자유주의 및
공화적 자유주의의
발전 토대*

**국제 무역에서
자유무역주의,
국내 정치에서
민주화를 통한
권위주의 타파 및
자유주의 정치체계의
확립, 그리고 인권 및
인도주의 원조의
정당성 옹호는
자유주의 가치를 지향**

비록 파머스틴의 정책이 세력균형과 유럽 제국주의의 연장선에서 시도된 것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나, 유럽 내에서 열강 간 충돌을 벗어나 국제사회에서의 상업적 자유주의 옹호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초기 모습으로 평가됨

- 20세기 들어 제1차 세계대전 후 우드로 윌슨의 국제연맹을 통합 집단 안전보장 체제(collective security) 계획안과 그가 파리강화회의에서 제안한 ‘14개조 평화원칙’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주의의 초기 골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 국제연맹(LN) 혹은 국제연합(UN)과 같은 집단안전보장 체제는 국제사회가 가진 무정부 상태의 위협을, 경쟁자의 존재를 주권 존중 원칙에서 인정하고 제도와 규범의 준수를 통해 이들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로크적 자유주의 사고에 근거함
- 탈냉전 이후 국제정치 질서의 동향은 자유주의 국제주의가 국제체제의 구조를 자유주의 질서로 변화시킬 것을 목표로 함. 국제 무역에서 자유무역주의, 국내 정치에서 민주화를 통한 권위주의 타파 및 자유주의 정치체계의 확립, 그리고 인권 및 인도주의 원조의 정당성 옹호는 자유주의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 타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인식됨

다. 미국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전개와 위기

○ 자유패권전략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국제전략은 자유 패권전략(liberal hegemony)에 두고 있음. 이는 “미국의 물질적 능력을 토대로 하여 미국적 가치에 맞게 자유국제질서를 구축해가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자주의적 안보 및 경제기구의 창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전 지구적 전파, 세계최강의 군사력 건설 및 해외전진배치 등이 전략의 수단”임(차태서 2017)
- 1990년대 초 냉전체제의 붕괴는 미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 이는 미국이 원하는 외교정책을 자유롭게 추구하며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우호적 대외환경으로 작용하였고, 미국은 자신의 외교적 이념을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투사하고 세계질서를 자신의 이미지대로 변형해갈 수 있는 역사적 기회로 포착(차태서 2017)
- 그러나 2001년의 9/11은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낳은 한 부작용을 의미하는 것임. 부시 행정부는 이들 적대 세력을 ‘악의 축’, ‘야만적 이슬람’ 등으로 규정하여 반 문명세력으로 문명과 반문명의 이분화를 시도. 즉, 경쟁이 아닌 적대의 개념으로 해석. 이는 앞서 언급했던 로크적 무정부상태를 홉스적 무정부상태로 인식함을 보여주는 사건

- 이러한 접근은 실무적으로도 정책 시각의 전환을 가져 왔는데,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는 9/11테러와 이라크 전쟁 이후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가치와 이익이 합치되는 국제질서를 새로 건설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에 있다고 천명(이혜정 2017: 121)
- 오히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이외의 대안은 모두 소멸되었다는 탈냉전기의 목적론적 역사철학은 네오콘의 급진적 이데올로기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차태서 2017). 그러나 트럼프가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국제질서에 대한 미국의 우월적 개입에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네오콘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임. 따라서 그의 등장을 정치적 보수주의의 부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트럼프 등장의 원인

- 트럼프의 대선 승리 배경에는 여러 논란이 있으나, 미국의 대외정책의 측면에서만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토론이 설득력이 있음
- 2008년 월가의 금융위기는 미국 패권에 대한 믿음에 의구심을 일으킴. 경제 위기 속에서 집권한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 재건에 집중해야 했기에 미국의 패권 추구 정책을 축소 혹은 지연시키면서 미국의 정치적·외교적·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해야 하는 이중의 노력이 필요. 이때 미국의 패권 유지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기존 부시 정부의 지구적·이념적 대 테러전쟁을 알 카에다와 그 동맹을 분열, 해체, 격퇴하는 전쟁으로 축소”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동맹 및 신흥 세력, 그리고 다자적 협력 아키텍처의 삼중구조를 지닌 외교노선으로 재구축하는 것”이었음(이혜정 2017: 157)
- 오바마는 그의 정치 슬로건 ‘담대한 희망’을 통해 미국의 재건을 약속. 즉, 미국은 건국부터 법치와 정의의 이념을 헌법을 통해 구현했으며, 합리적이고 신중한 힘의 사용, 동맹과의 협력, 미국적 가치의 우월함에 의해 미국적 예외주의가 성공하였다고 진단. 이런 전제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 및 평화사업, 이슬람 문화 상호 존중, 핵무기 폐기, 민주주의 및 인도주의 지원 등을 새로운 협력의 대외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이를 새로운 책임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소명으로 제안. 그러나 이러한 담대한 희망은 ‘새로운 책임’으로 결실을 맺지는 못함(이혜정 2017: 187-188)
- 2010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는 오바마의 경제정책과 대외정책의 한계를 정치적으로 반영한 것이었고 이는 이념적 극단화(티파티 운동)로 분출되기 시작. 이들은 대외정책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회의적이었고 미국의 가치를 재건하는 새로운 책임의 실천성에 의구심을 가짐
- 이후 트럼프의 등장은 과거 미국의 잭슨주의 외교전통과 유사한 특징을

*2010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는
오바마의 경제정책과
대외정책의 한계를
정치적으로
반영한 것 ...
대외정책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회의적이었고
미국의 가치를
재건하는 새로운
책임의 실천성에
의구심*

영국의 결정은**자유주의 국제질서를****전면 부인하는****것이라기보다는****국내정치 위기를****극복하고 자국이****주도권을 쥔 선별적인****자유주의의 채택으로****해석**

보여줌. 즉, 세계시민주의적·자유국제주의적 프로젝트가 고유한 미국의 독립성과 특질을 위협하는 요소로 기능할지도 모른다고 우려(차태서 2017). 이는 오바마의 기존 대외정책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임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의 해외 진진 배치 전략을 수정하여 병력 철수 혹은 축소하는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며 동맹국들은 자신의 방위비를 보다 더 많이 분담하든지, 혹은 스스로 자신을 방어해야만 할 것”이라고 선언(Bloomberg)

○ 브렉시트의 성격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200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난 이민자 통제와 둘째, 가입 이후 항상 문제가 된 EU 분담금에 대한 부담에 있음(황기식·문보경·손수연 2017). 따라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국가 고유의 주권 회복, 유럽연합 분담금에 대한 예산 절감, 유럽연합에 얽매이지 않는 독자적 규제 실시 및 이민 통제 등이 가능해진다는 것임(전혜원 2016)
- 그러나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과의 탈퇴 협상을 앞두고 내놓은 협상 전략에서 ‘EU와 새로운 동반자 협정 체결’,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 관계 구축’, ‘범죄 및 테러리즘과의 전쟁에서 협력’ 등 일방적 태도의 견지보다는 협력적 태도의 유지에 힘을 기울임. 이주자(移住者) 감독은 강화하되 친(親) 비즈니스 협상을 유지하겠다는 것임(도종운 2017). 따라서 영국의 결정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내정치 위기를 극복하고 자국이 주도권을 쥔 선별적인 자유주의의 채택으로 해석됨
- 때문에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파장의 정도가 다를 것으로 예상됨. 즉, 브렉시트가 예측 가능한 면이 있고 영국이 근본적으로 자유무역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의 국제 무역질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전망은 자유무역의 거부가 아닌 자국 우선주의 논리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을 찾기 어려워 불확실할 뿐 아니라 국제협력의 전개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음(김세원 2017)

3. 지역주의의 동향**가. 지역주의의 의미와 전개**

○ 고전적 의미의 지역주의

- 지역주의(regionalism)는 “국가가 주도가 되어 특정의 제도와 전략적

수단으로 주어진 지리적 범위를 진흥시키는 것”으로 “국가-하위국가(sub state)-비국가 행위자에 걸쳐 일관된 하향식 정책을 취하는 경우”인 반면, “지역화(regionalization)는 국가를 초월한 상호작용(transaction)의 물리적 패턴을 말하는 것으로 가족 간의 연계, 이주, 무역, 자본 이동, 초국경적 미디어 이용 등이 포함됨”(Beeson and Stubbs 2012: 1)

- 그러나 이러한 정의를 취할 경우, 국가 간의 상호 작용과 상호의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1930년대 취해진 지역 중심의 보호주의는 이러한 지역주의의 전형적인 사례였음(Boás, Marchand and Shaw 2003)
- 1930~40년대의 일본 및 독일의 제국주의 정책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역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나쁜 지역주의(malevolent regionalism)’의 사례였음(Telò 2001). 또한 전후 1940년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서구가 특정지역(남반구)을 상대로 했던 지역프로젝트 및 지역기구의 설립은 지역주의의 또 하나의 물결로 고전적 지역주의(old regionalism)의 사례였음(Hettne 2003). 이후 60~70년대의 경제적 지역주의는 다자주의라는 틀로 미국 중심의 패권 안정을 추구한 사례. 그러나 미국이 외친 “자유세계(free world)”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보호주의 장벽에 의해 좌절됨
- 고전적 지역주의의 실패의 원인은 너무 많은 정책이 서로 모순되게 얽혀 있었고, 정책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완비가 부족했던 면이 컸으며, 식민주의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실천이 의지를 따라 주지 못했던 측면이 있음(Telò 2001).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역주의는 이는 새로운 현상의 발견이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이미 존재하였던 지역 블록화의 형태로 이미 재현된 바 있음. 다만, 실천적 정당성과 규범의 혼동으로 포괄적인 지지와 역량을 키우지 못한 것이 많은 이들이 이를 간과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음

○ 신지역주의

- 한편 1970년대에 유럽에서 촉발된 두 번째 지역주의의 물결은 이른바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로 개념화됨. 비록 연구자들마다 약간의 용어 차이-제2세대 지역주의, 포스트 헤게모닉 지역주의, 열린 지역주의-가 있지만, 대략 다음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음
- 신지역주의 특성은 지구화(globalisation)의 과정이 보다 넓고 깊게 지역주의의 새로운 형태를 추동하였다는 점임. 이는 지구적 차원에서 국제 무역, 외국 자본 투자, 개발과 부흥을 동시 다발적으로 자극하면서 수많은 지역 협의체와 기구를 설립하면서 유형화됨. 이러한 신지역주의의 제도화는 EU, NAFTA, ASEAN, 안데스 공동체, MERCOSUR, 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ARC(남아시아지역협력기구) 등으로

고전적 지역주의의

실패의 원인은

너무 많은 정책이

서로 모순되게

얽혀 있었고,

정책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완비가

부족했던 면이 컸으며,

식민주의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실천이

의지를 따라 주지

못했던 측면이 있음

**신지역주의는
'지역의 형성
(emerging
region)'이라는
보다 자발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뿐 아니라
다른 행위자들로
적극적으로
결합(merge)하여
협력을 필연적인
과제로 인식**

나타남(Telò 2001)

- 헤트네에 따르면, 양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첫째, 고전적 지역주의가 냉전과 양극체제를 기반으로 하였다면, 신지역주의는 다극체제와 지구화의 시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 둘째, 고전적 지역주의가 하향식 생성의 논리를 지녔다면, 신지역주의는 '지역의 형성(emerging region)'이라는 보다 자발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뿐 아니라 다른 행위자들로 적극적으로 결합(merge)하여 협력을 필연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그래서 지구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주권의 공유(the pooling of sovereignty)를 마다하지 않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고전적 지역주의가 내부 지향적이며 보호주의(inward-oriented and protectionist) 성향을 가졌던 반면, 신지역주의는 보다 개방적이어서 세계 경제질서에 상호의존적인 호환성을 갖고 있다는 점
- 넷째, 고전적 지역주의가 안보적·경제적 차원에서 각각 구분된 영역적 차원의 지역주의라면, 신지역주의는 보다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사회적 과정에 따른 결과물이었다는 점
- 다섯째, 고전적 자유주의가 근거리 국가들과의 관계 맺기에 그치고 있다면, 신지역주의는 보다 지구화된 구조적 변화와 연관되어 있으며, 국가 이외에 글로벌 시스템에서 작동되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일정 부분의 역할 형성을 인정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였다라는 점임(Hettne 2003: 23-24)

나. 자유주의와 지역주의의 연동 논리

○ 글로벌리즘

- 자유주의 원리는 지구화(globalism)가 도래하는 계기가 되었고, 지역주의는 역설적으로 글로벌리즘에 의해서 강화된 측면이 있음
- 이브 티베르기엔(Yves Tiberghien 2017)은 트럼프의 등장 이전에 이미 지구화(globalisation)가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또한 글로벌 파워 간의 힘의 전이가 역사적 수준으로 불릴 정도로 크게 일어나면서 미국 주도의 패권이 종언을 맞을 상황에 있었다고 전제
- 그가 던진 질문은 지역주의가 글로벌 자유주의의 현실을 구원해 낼 수 있을지, 그리고 글로벌 수준에서 자유주의 질서를 유지시켜 줄 수 있을까하는 점임. 그에 따르면 자유주의는 글로벌 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역으로는 자유주의의 조직화된 원칙들을 글로벌 질서에 안착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옴
- 자유주의는 성격상, 주요 국가들의 체계적인 합의에 따라 글로벌 경제의 과정을 안정화시키기도 하지만, 체제의 위협을 다룰 만한 글로벌

수준의 규칙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유지가 불가능. 티베르기엔은 지금은 이러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진단. 또한 현재의 글로벌 전이 현상을 보건데, 1914년 혹은 1939년의 글로벌 위기 혹은 대공황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전이(a peaceful transition) 역시 가능한 수준이라고 봄. 이러한 그의 가정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 혹은 비국가 행위자들이 그러한 전이를 주도할 것이고, 이는 그들이 제정한 글로벌 수준의 규칙에 따라 투자와 같은 중요 사안이 결정됨을 의미
- 이는 새로운 지도국가, 혹은 새로운 제도의 힘을 예견케 함. 그러나 이것은 2차적 제도에 따라 파생된 질서로서, 보다 강화된 지역주의 혹은 지역간주의(Trans-regionalism)에 따라 새로운 무엇인가가 등장할 수도 있다고 봄

○ 다자주의

- 지역주의는 이론화를 위한 대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지역적 요인이나 지구적 변화의 차원에 초점을 두어서 관찰해야 하는 하나의 과정, 따라서 외부적 도전과 내부적 응답 사이의 변증법적인 관계를 외재적·내인적 요인의 결합을 통해 역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자유주의 질서(liberal order)는 규제와 조절을 매개로 외부적 도전에 의하여 등장한 역사적 응답의 형태(중상주의, 보호주의, 경제적 민족주의 국가 사회주의 등)를 규정한 변인임. 따라서 “규제와 조절(regulation and control)은 자유화의 수준을 결정하는 응답”의 형태임(Hettne 2003: 22)
- 지역주의 형성에서 거버넌스 측면으로 논의할 때 중요한 축은 다자주의(multilateralism)임.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정치의 행위자들은 ‘개방성’과 ‘집단적 행위’라는 측면을 강조하며 다자주의적 성격을 지닌 다양한 제도를 형성(Burley 1993). 다자주의란, “세 개 이상의 국가들이 모인 그룹에서 국가 정책을 조정하는 관행”(Keohane 1990: 731), 또는 “어떤 원리에 따라 세 개 이상의 국가들이 관계를 조정해 가는 것”(Ruggie 1993: 8) 등으로 정의
- 법 이론적인 시각에서 다자주의는, ‘법치(rule of law)’라는 자유주의적 개념을 국제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보기도 함. 이를 풀이하자면, 국민주권 시대에서 자유는 법의 지배 안에서 보장이 가능하며, 이때 소극적 자유는 권리의 보호이지만, 적극적 자유는 권리의 요구임. 그리고 양자 모두 법치의 역할을 필요로 함. 그런데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국력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안전이 된 사안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정책의 공조를 도모하는 것을 지향함. 이것은 곧 다자주의적 태도와 맞는 것. 법 이론가들은 이것이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적극적 자유를 실현하려는 노력이라고 봄(Burly 1993: 141-146).²⁾ 따라서

*지역주의 형성에서
거버넌스 측면으로
논의할 때 중요한
축은 다자주의 ...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국력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안전이 된
사안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정책의 공조를
도모하는 것을 지향*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양립가능성 문제는
국제무대에서 더 이상
중요한 이슈가 아님**

- 다자주의는 자유주의의 국제적 차원의 실현으로 평가됨
- 자유주의적 제도주의자(liberal institutionalist)들은 다자주의를 경제적 개방성 및 법치 그리고 국가의 자율성과 연계되는 것으로 봄. 특히 무역 분야에서 다자주의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보다 많은 국가(행위자)들을 세계 경제에 편입될 뿐 아니라 시장의 크기도 보다 커짐(Tussie 2003)
 - 반면, 홉스적 국제정치관을 전제하고 있는 (신)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은 탈냉전 후 국제정치에서 재검토되기 시작한 ‘규범적 제약(normative constraints)’과 ‘제도(institutions)’의 문제는 패권 안정론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 매우 낮선 것으로 평가(Ruggie 1993)
- 경제적 자유주의에 의한 지역 FTA의 형성
- 경제 분야의 경우, 글로벌 수준의 자유주의 무역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구인 WTO가 여러 가지 장점-자유무역의 방해물 제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 역시 가지고 있음
 -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다자적 협력의 어려움임.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가들이 경제적 지역주의(economic regionalism)로 눈을 돌리고 있음. EU, NAFTA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몇몇 활동은 이러한 지역주의를 대표하는 제도임
 - 초기 경제통합 단계에서는 의제가 된 몇 가지 주제만 공동의 합의를 도출하여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맞게 시장 자유화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수의 법칙(law of small numbers)’으로 말미암아 다자주의, 지역주의는 많은 이점을 가짐
 - WTO에서는 비관세 장벽 등 쉽게 합의하기 어려운 아젠다가 지역 FTA에서는 타결이 가능했음.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양립가능성 문제는 국제무대에서 더 이상 중요한 이슈가 아님. WTO 회원국들 대부분은 지역/개별 FTA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라고 분석(김세원 2017)
 - 여러 곳에서 목격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 FTA의 체결은 참여국의 수를 늘리면서도 다자적 무역 자유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수준의 WTO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음. 즉, 세계 무역 거버넌스의 시각에서 보자면 FTA는 이중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른 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함. WTO 체제에서 조정과정은 시장 왜곡이 발생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세계가 자유로워지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에 더해 FTA는 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무역의 자유화를 효율적으로 증진시켜 양자가 협력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임(김세원 2017)
 - 경제적 지역주의는 경제 분야에만 한정된 제1세대 지역주의의 형태이지만, 향후 정치, 사법, 사회 등 다른 분야의 지역주의를 유도하는 시도임

- 다자주의의 새로운 전개: 신(新)다자주의
 - 최근 동향은 지역주의의 거버넌스 기제로서 신(新)다자주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1944~47년에 미국의 패권에 의해 탄생된 다자주의 네트워크는 역사적으로 중요. 그러나 세 가지 중요한 한계가 있었음. 글로벌 네트워크는 충분히 효율적이지 못했고, 결정들은 각 국가들을 만족시킬 만한 수준으로 이행되지 못했으며, 어떤 결정은 충분히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못했음
 - 반면, 신다자주의는 그 이전의 다자주의보다 더 투명성을 강조. 말하자면 더 개방적이어야 하며, 더 정당해야 함을 강조. 신다자주의는 민주주의의 일부로서 위에서 패권적 규칙들을 비판하며 여론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존중. 또한 어느 곳에서나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면서 보다 규범적(normative) 특성을 지님. 신다자주의는 지역 실체들—이르테면 EU, ASEAN, MERCOSUR 등 보다 분권화된 행위자들—의 역할을 포함해 상향식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열려 있어야 하고 또한 정당성을 가진 효율적 글로벌 거버넌스를 가져야 함(Telò 2009)³⁾
 - 이처럼 개방성, 정당성,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 등은 자유주의의 논리와 일치됨. 또한 국제규범의 준수와 초국경적 협력과 의존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기저에서 파생되어 전개된 정치적 실천 행위의 유형으로 평가됨⁴⁾

4. 자유주의 이후의 국제질서

가. 자유주의의 대체 혹은 발전

-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위기와 파생 효과
 - 트럼프 등장 이후 미국이 주도하였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파괴의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지, 혹은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념의 형성이 시작되었는지는 아직 판단하기에 이름
 - 다만, 지구화(globalism)의 전개는 어느 특정 국가, 특정 정치인의 이념적 강요와 실천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대적 흐름임. 인공지능의 발달, 무인자동차, 지구환경에 대한 관심, 생명권의 존중, 개발과 평화의 연계 등 최근의 국제적 이슈는 전 지구적 차원의 프로젝트이며 이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보다 멀리,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 또한 SNS의 보편화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수월하게 하여 자유주의의 확산을 보다 가속화시킴
 - 경제 분야에서 TPP, TTIP 등의 좌절 혹은 중단으로 무역과 거래 차원의 자유주의적 기제가 주춤한 것은 사실임.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신다자주의는
민주주의의 일부로서
위에서 패권적
규칙들을 비판하며
여론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존중*

**만약 다른 국가들이
느끼기에 미국이
더 이상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한 그런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정말 생각하게
된다면 ...**

브렉시트가 근본적으로 자유주의와 지역주의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국의 EU탈퇴는 일시적, 잠정적 충격에 그칠 것이나, 트럼프 등장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는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 김세원(2007)에 따르면, 첫째, 자국의 경제 이익을 우선시하는 미국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일방주의적-양자주의적(unilateralism-bilateralism) 성격을 띤 것으로 평가. 그는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국가나 한국처럼 FTA가 이미 발효 중인 무역파트너들에게 FTA 재협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는 무역 분쟁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예상. 트럼프 행정부의 소위 ‘공정무역’ 요구는 단기적 안목의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을 함의. 이는 오로지 미국 경제의 국익적 측면만을 의미하며 일방에만 의존하는 위험성을 가짐.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국제경제에서 심각한 보호주의적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음. 테라다 다카시(Terada Takashi 2017)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결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되면서 핵심과제로 삼았던 시장 확대 드라이브와 같은 지역통합의 전개를 붕괴시키고 말 것이라고 진단

- 둘째, 탄시생(Tan See Seng 2007)은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보복조치는 단기적인 이슈에 그칠 것이고, 보다 근본적인 위험은 다른 곳에 있다”고 우려. 즉, 다른 국가들이 글로벌화된 지금의 경제체제에서 전환점이 될 정도로 강력하게 기존의 글로벌 규칙과 제도에 반기를 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만약 다른 국가들이 느끼기에 미국이 더 이상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한 그런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정말 생각하게 된다면 이러한 현실의 도래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봄. 탄시생이 던지는 또 하나의 불확실성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反)자유주의적 아젠다를 추구하면서 예상치 않은 사건을 일으킨다는 것

- 말하자면,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정책에서 일련의 돌발적인 전환을 꾀한다는 것임. 동맹국들에게 부담을 지우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에 관한 과거의 논의를 일거에 뒤집는다든지, 시리아에서의 미국의 역할, 하나의 중국 정책, 남중국해에서의 관여, 미국 수출입은행의 정책 등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것이 바로 그러한 태도임. 이는 신뢰성의 문제를 불러일으켜 상호존중과 다자주의, 제도 중심의 거버넌스, 그리고 일관성에 의존하는 자유주의적 태도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 것임

○ 칸트적 국제관계관의 확대: 정당성의 논리

- 자유주의 이전의 국제관계가 홉스적 시각에서 설명이 가능했고, 자유주의의 원리가 밀과 로크적 시각의 관계(relation)에 근거하였다면 자유주의

- 이후의 국제관계와 지역주의는 사회, 문화, 윤리적 규범 등에 의하여 보다 호혜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실천해야 함
- 흡수적 적대관계, 로크적 경쟁관계와 달리 칸트적 문화에서는 관계 규정을 친선(friendship)으로 유형화. 이는 ‘비폭력’과 ‘상호원조’의 규칙으로서 다원적 안보 공동체, 집단안보와 연계됨(Wendt 1999)
 - 칸트적 협력이 로크와 다른 것은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규범이 아니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면화의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것임. 말하자면 흡수가 물질적 강압을, 로크가 자기이익 실현을 관계의 기제로 보았다면 칸트는 정당을 기제로 의제함
 - 기존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자기이익 실현을 위한 제도적 건설에 보다 방점을 두고 정치적 행위가 결정되었다면 최근의 경향은 자기이익의 정당화에 보다 관심을 두고 있음, 이는 개발협력, 인도주의 원칙(생명권 보장), 인권보호와 개입 등 물질적인 자기이익을 넘는 정당성 확보는 정치문화의 개편과도 연관됨. 신다자주의 논리는 거버넌스 차원에서 자유주의의 윤리적 정당성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적 기제로 해석됨
 - 최근 논의가 시작된, ‘진보적 자유주의(progressive liberalism)’ 혹은 ‘포스트 자유주의(Post-liberalism)’ 등은 경제적으로는 무분별한 자본시장(rampant market capitalism) 중심에서 벗어나 경제적 정의와 상호성을 회복하자는 데 방향성을 둬. 또한 사회적으로 개인주의, 평등주의에서 벗어나 사회적 연대와 박애적 관계(fraternal relations)로의 이동을 주장. 또한 정치적으로는 기득권의 이득을 지키는 소수자 정치에서 벗어나 정체성을 공유하고 시민사회가 매개가 되어 시장과 국가가 조화를 이루어 균형 잡힌 이익에 기반 한 다수의 정치로 이동이 필요함을 강조함(Pabst 2017)
 -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트럼프의 등장, 브렉시트의 결행 등이 자유주의 이후의 시대적 관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당성의 논리에 얼마나 부합할 것인가가 관건임

나. 경쟁적 지역주의(competitive regionalism)의 등장

- 2007~2015년간 펼쳐진 세계의 위기—금융위기, 난민위기, 저성장, 빈부의 격차 확대, 자연재해와 파괴, 테러리즘, 사이버 기술에 대한 의존과 위협—등은 새로운 시대적 도전임
-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유럽의 분열위기와 관련하여,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2012)는 코스모폴리탄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인들이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기를 심화시켰으며, 국가를 가로지르는 민주주의(transnational democracy)와

**최근 논의가 시작된,
'진보적 자유주의'
혹은
'포스트 자유주의'
등은 경제적으로는
무분별한 자본시장
중심에서 벗어나
경제적 정의와
상호성을
회복하자는 데
방향성**

경우에 따라 지역 간
주의의 경쟁—
블록화의 경쟁—으로
나타날 가능성 ...
이는 미국에 대한
실망감이 국제정치의
행위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모색할
기회를 주는 것

민주주의 이후의 실천적 연방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도가 필요함을 역설

- 한편, 금융위기 이후 등장한 국제적 책임감의 공유, 미국 일방이 아닌 중국, 러시아, 일본, 아세안 등 기타 행위자들의 집단적 다극화는 지역 블록을 중심으로 한 ‘경쟁적 지역주의(competitive regionalism)’의 배열을 예상케 함. 예컨대 RCEP, AIIB, AEC, EEU 등은 진정한 지역주의의 형성이라기보다는 블록화의 대결 혹은 경쟁으로 인식될 수 있음
- 지구화는 문명의 발전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져다주며, 이때 국가와 지역(regions)은 두 가지 유형의 정치적·경제적 목표를 설정하게 됨. “첫째, 동맹 또는 친선의 방식으로 무역 관행 혹은 다차원적 관계를 보다 성숙화시키려고 하며(ex. 미국 중심의 TPP와 중국 중심의 RCEP), 둘째, 이에 포함되지 않는 대응국가는 힘을 통해 권위와 위계적 논리를 지역 내부의 행위자들에 부과하려는 경향이 있음. 예컨대 유럽연합에 동화되려는 우크라이나의 특정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세력과 연합한 러시아의 압력 간 긴장관계 형성이 그러한 조짐을 보임”(Telò 2017, 51). 이는 앞서 말했듯이 경우에 따라 지역 간 주의의 경쟁—블록화의 경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이는 탄시생이 지적한 대로 미국에 대한 실망감이 국제정치의 행위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모색할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함
- 특히 국내의 사회적 요인들, 정치적 압력 그리고 민주주의에 따른 참여 의식 등은 상향식 요구와 의사결정을 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역내의 규율과 민주적 정당성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성을 띠게 됨. 다만, 최근 10여 년간 발생한 금융위기, 테러리즘, 난민위기, 빈부격차 심화 등은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생존을 위한 정책 규율의 활로를 찾고 보다 자율적인 정책 공간을 만들기 위한 근거가 됨(Telò 2017: 53)
- 아직 구체적인 사례가 충분히 관측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지역주의 방향은 경쟁의 지역주의 혹은 협력의 지역주의가 어떤 관계배열을 할 것 인지가 관건. 이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강대국 일방의 지역주의에 포함되더라도 이에 대응되는 지역주의 블록과의 경쟁 속에서 소외될 것인지 혹은 양쪽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임

5. 마무리: 정책의 방향 제언

- 자유주의의 관념은 시대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함. 말하자면, 물질적 구속을 넘어 자기이익의 정당화를 위한

윤리적 개념의 설정과 자구의 논리가 아닌 이타의 논리를 모순되지 않게 제시하는 것

-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여전히 생존의 문제가 국제관계의 핵심. 다만 그 요인은 삶과 죽음의 선택적 생존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통해 자기이익을 실현시키는 것. 향후 지역주의는 자율성의 증진과 경쟁적인 블록화의 이중적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하는 데 방향 타가 놓일 것으로 보임
- 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논의하자면, 이용욱 교수(2017)의 지적대로 첫째,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주요 제도인 각종 금융협력(ex.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CMIM/아시아 채권 발전방안 ABMI)에서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대한 ‘공동주인의식(We-Ownership)’ 확립하고, 둘째, 간헐적이지만 잠재적 수원국을 향한 ‘도덕적 해이 담론’의 성찰적 맥락화(Reflexive Contextualization)를 시도하고 회원국 간 신뢰 제고를 도모하는 외교를 전개하며, 셋째, 동아시아 금융협력이 ‘제도적 생존’을 넘어 다른 지역의 금융협력에 모델로 제시될 수 있다는 비전을 공유하게 하도록 방향성을 잡아야 할 것임
- 지나친 국익우선 주의가 단기적 이익추구의 외교에 매몰되어서도 안 될 것임. 예컨대 과거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서 보듯이 경제적 이익 중심의 개발정책은 시행자와 수혜자 간의 괴리가 있었음.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자면 사회적·문화적 접근을 보다 고려하여, 정재원 교수(2017)의 지적대로 “현지 주민의 삶의 터전과 환경을 보전하고 그들의 인권과 생존권과 복지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공존공영, 평화복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그들과의 진정한 유대감을 높이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게 될 것임

**금융협력이
'제도적 생존'을
넘어 다른 지역의
금융협력에 모델로
제시될 수 있다는
비전을 공유하게
하도록 방향성을
잡아야 ...
지나친 국익우선
주의가 단기적
이익추구의 외교에
매몰되어서도
안 될 것**

주석

- 1) ISIS(또는 ISIL)의 변천에 관해서는 Fawaz A. Georges, *ISIS: A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2016) 참조.
- 2) 국제법의 전통에서 국가와 대외관계에 대한 법률은 ‘공존에 관한 법(law of coexistence)’과 전후(戰後) 국제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현상과 관련하여 나타난 ‘협력의 국제법(law of cooperation)’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협력의 국제법은 주체, 범위, 기능 등에서 전통적인 국제법과는 다른데, 이는 20세기 중반 이후 등장한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Friedmann(1964)과 Burly(1993) 참조.
- 3) 2009년 5월 10일 브뤼셀에서 필자와 인터뷰.
- 4) 다자주의의 정책 결정기제, 구성동인, 협력의 기제 등에 대한 토론은 도중윤(2014) 참조.

참고문헌

- 김세원. “Entering a New Phase of Regionalism in Asia amid the Changing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2017 제주포럼 자유주의 이후의 지역주의 패널 Keynote Speech.
- 도중윤. 2014. “20세기 다자주의의 전개와 21세기 중견국 외교의 방향.” 2014 JPI 공동연구 시리즈.
- _____. 2017. “브렉시트를 앞둔 영국, 그들의 협상 원칙은 무엇인가?” 『JPI PeaceNet』, 02.13.
- 이용욱. 2017. “변환하는 자유주의국제질서와 기로에 선 동아시아 지역금융협력의 현재와 미래.” 『JPI 정책포럼』, 2017-2.
- 이혜정. 2017. 『냉전 이후 미국의 패권』. 파주: 한울.
- 전혜원. 2016. “브렉시트의 동향과 향후 전망: 정치적 함의를 중심으로.” 『IFANS, 주요국제문제 분석』, 2016-08.
- 정재원. 2017. “러시아식 자유주의의 한계: 트럼프 등장 이후의 러시아 대외정책.” 『JPI 정책포럼』, 2017-6.
- 존 스투어트 밀 저. 서병훈 역. 2005. 『자유론』. 서울: 책세상.
- 차태서. 2017. “트럼프 현상과 자유세계질서의 위기.” 『JPI 정책포럼』 2017-1. 제주 평화연구원.
- 황기식 · 문보경 · 손수연. 2017. “영국 메이(May) 총리의 브렉시트(Brexit) 정책에 대한 집권보수당과 의회의 입장: 주요 이슈별 다차원적 분석.” 『유럽연구』 vol.35, no.2, pp.1-24.
- Beeson, Mark, and Richard Stubbs. 2012. “Introduction.” In *Routledge Handbook of Asian Regionalism*. Edited by Mark Beeson and Richard Stubb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1-8.

- Bergsten, Fred. 2005.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Economy*. Columbia Univ. Press.
- Bloomberg. “Trump Says NATO Allies Must Meet Defense Spending Obligation.”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04-12/trump-says-nato-allies-must-meet-defense-spending-obligations>(검색일: 2017.10.20).
- Boås, Morten, Marianne H. Marchand, and Timothy M. Shaw. 2003. “The Weave-World: The Regional Interweaving of Economies, Ideas and Identities.” In *Theories in New Regionalism*. Edited by Fredrik Söderbaum and Timothy M. Shaw. New York: Palgrave, pp.197-210.
- Burley, Anne-Marie. 1993. “Regulating the World: Multilateralism, International Law, and the Projection of the new Deal Regulatory State.” In *Multilateralism Matters*. Edited by John G. Ruggi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125-156.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3. “A Secure Europe in a Better World.” *European Security Strategy*, Brussels, 12 December.
- Doyle, Michael W. 1986. “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80, no.4(Dec.), pp.1151-1169.
- Ferguson, Niall. 2009. *The Ascent of Money: A Financial History of the World*. New York: Penguin Books.
- Friedmann, Wolfgang. 1964. *The Chan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Law*.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Fukuyama, Francis. 1989. “The End of History?” *The National Interest*, No.16 (Summer), pp.3-18.
- _____. 2003. *Our Posthuman Future: Consequences of the Biotechnology Revolution*. New York: Picador.
- Georges, Fawaz A. 2016. *ISIS: A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Habermas, Jürgen. 2012. *The Crisis of the European Union: a Response*. Cambridge: Polity.
- Hettne, Björn. 2003. “The New Regionalism Revisited.” In *Theories in New Regionalism*. Edited by Fredrik Söderbaum and Timothy M. Shaw. New York: Palgrave, pp.22-42.
- Keohane, Robert O. 1990. “Multilateralism: An Agenda for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vol.45, no.4(Autumn), pp.731-764.
- Keohane, Robert O, and Joseph S. Nye. 2001. *Power and Interdependence* (3rd edition). New York: Addison Wesley.
- Locke, John. 2003. *Two Treatises of Government and 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New He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
- Pabst, Adrian. 2017. “Postliberalism: The New Centre Ground of British Politics.” *The Political Quarterly*, vol.88, no.3(July-September), pp.500-509.
- Ruggie, John. 1993. “Multilateralism: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In *Multilateralism Matters*. Edited by John G. Ruggi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3-47.

- Tan See Seng. 2017. “Can East Asian Regionalism: Bulwark against a “Post-Liberal” International Order?” Presentation Paper in Jeju Forum.
- Telò, Mario. 2001. “Introduction.” In *European Union and New Regionalism*. Edited by Mario Telò. Aldershot: Ashgate, pp.1-16.
- _____. 2017. *Regionalism in Hard Tim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Terada Takashi. 2017. “Era of Bilateralism is Back? Trump’s Trade Policy and Asian Regionalism.” Presentation Paper in Jeju Forum.
- The White House. 2017. “Presidential Memorandum Regarding Withdrawal of the United States from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Negotiations and Agreement.”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1/23/presidential-memorandum-regarding-withdrawal-united-states-trans-pacific>(검색일: 2017.10.20).
- Tiberghien, Yves. 2017. “Global Integration, Rising Populism, and the Future of Liberalism: Does Regionalism Offer a Resilient Solution?” Presented paper in Jeju Forum.
- Tussie, Diana. 2003. “Regionalism: Providing a Substance to Multilateralism?” In *Theories in New Regionalism*. Edited by Fredrik Söderbaum and Timothy M. Shaw. New York: Palgrave, pp.99-116.
- Wendt, Alexander. 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저자 약력

■ 도종윤

現 제주평화연구원 지역통합연구부장. 브뤼셀 자유대학교에서 정치사회학 박사학위 취득. 연세대 연세-SERI EU센터 Post-Doc,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성균관대, 이화여대, 건국대 강사 역임. 주요 논문으로 “환유를 통한 국제정치 텍스트의 해석(2014)”, “국제정치학에서 주체물음(2013)”, “유럽연합의 개발협력전략(2013)” 등이 있음.

The Trump Phenomenon and the Crisis of the Liberal World Order

CHA Taesuh (Research Fellow, Institute of National Interests, CAU)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Donald Trump's presidential election victory with regard to the global political economic system, and the foreign policy direction of the new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To this end, by analyzing the continuity and changes in post-Cold War US grand strategy, this paper reveals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deploy a new Jacksonian foreign policy that deviates from the existing liberal consensus. Furthermore, this paper predicts the impact of Trump's foreign policy o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and, in conclusion, discusse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rump's election victory on the future of the liberal world order as well as its implications with regard to Korea's national strategy.

The Changing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the Present of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at a Crossroads

LEE Yong Wook (Professor, Korea University)

Since 2013, there has been a pronounced need for cooperation with regard to a financial safety net on both global and regional level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G20 and the IMF. The policy cooperation for a financial safety net on global and regional dimensions may, paradoxically, weaken the legitimacy and function of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From the perspective of East Asia, although policy cooperation with the IMF is a necessity, it may prove to be a double-edged sword depending on its conditions and structure, based on the current status of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The negative possibility implied in the metaphor of a double-edged sword is that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may eventually operate as a mere junior partner to the IMF. Therefore, now more than ever, there is an urgent need for capacity-building with regard to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The 2018 ASEAN+3 summit is an opportunity and challenge for Korea's financial diplomacy. In the coming year, Korea will serve as the joint chair country of the 2018 ASEAN+3 summit, and face an opportunity to lead capacity-building efforts for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In particular, the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CMIM) concluded by the ASEAN+3 in 2010 will be reviewed for the first time to be revised at the 2018 summit, while the 2018 summit will determine the success or failure of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In this context, this report presents the following three policy directions for Korea's financial diplomacy toward a new leap forward for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The first is the establishment of "We-Ownership" for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The second is the reflexive contextualization of the "moral hazard discourse" that occasionally emerges in the negotiation process, and the reinforcement of trust among member states through the said effort. The last is the discourse diplomacy to share a vision to present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as a model for financial cooperation in other regions, beyond a means of "systemic survival."

Limits of Russian Liberalism: Russian Foreign Policy after the Emergence of Trump

CHUNG Jae-Won (Professor, Kookmin University)

Currently facing tension against the West following the Ukrainian crisis, Russia is taking an anti-US/anti-West stance on the surface under state leadership, but there is a need to focus on its behavior to become an active actor in the liberal market economy under liberal democracy as opposed to standing in its opposition. In summary, Russia clearly recognizes that it cannot reject the current (neo-) liberal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ic order in order to prevail past the interference of core Western countries, amidst limitations in terms of Russia's position and role within the global capitalist system. As a country that is unable to lead the global capitalist system, Russia cannot reject the (neo-)liberal order and transition into policy directions such as isolationism or nationalism, even if such changes are state-led, if it wishes to engage in development efforts for its Far East and Siberian regions or grow into a Eurasian great power that connects the Asia-Pacific region to Europe. In addition, although Russia appears to strengthen its anti-West stance and implement an Asia-centric policy,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amid tensions with the West, reinforcement of its alliance with China, diversification of its oil and gas exports to non-Western regions, and participation in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Eurasian Economic Union and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uch efforts do not constitute a fundamental paradigm shift. Therefore, Russia may use its geopolitical uniqueness as an instrument, moving against (neo-)liberalism in relation to the West while seeking cooperation under principles of (neo-)liberalism with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Furthermore, since Russia may also actively establish cooperative partnerships with Western state capital depending on its developmental needs, Russia's brand of liberalism may appear as though it is pursuing two contradictory policies depending on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situation facing Russia and Eurasia. In conclusion, it seems clear that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in the Eurasian region are likely to create a capital flow toward the real economy as opposed to the financial economy, and although countries in this region are lacking in terms of progressive discourses for development and growth, Korea must nonetheless pursue a differentiated strategy with a progressive and harmonious independent approach.

Regionalism after Liberalism: Challenges for Regionalism Following the Emergence of Brexit and Trump

DOH Jong Yoon (Chair of Regional Integration Program, Jeju Peace Institute)

The emergence of terrorism in various countries of the West in the 21st century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began on Wall Street in the United States in 2008 have created doubt toward the US-led neoliberal economic order across the world. Amidst these circumstances, the Brexit referendum of May 2016 and the victory of Donald Trump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of the same year have led numerous experts to voice the sense of threat that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s facing a crisis. Indeed, the two most noteworthy phenomena within the international economy in early 2017 were Brexit and the changes in the US trade policy, which both represent a significant reflection of national interest. Regionalism is a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rocess to induce regional cooperation through multilateralism and democratic governance based on globalism as the product of liberalism. Under this premise,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direction of change in regionalism since the crisis of liberalism and our response, following the functional development of regionalism under the US-led international liberal reality and liberal foundation that had continued since the mid-20th century. This paper asserts that, whereas international relations prior to liberalism could be explained from a Hobbesian perspective and the mechanisms of liberalism were based on Millian and Lockian relation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regionalism after liberalism must be established through more reciprocal and horizontal relationships based on social, cultural and moral norms. In other words, this paper recognizes the need to surpass Hobbesian animosity and Lockian competition, perceiving the definition of relationships from a Kantian perspective as “friendship,” which may become a core challenge in the future. Recent discussions of “progressive liberalism” or “post-liberalism” advocate the need to restore economic justice and reciprocity, emphasize social solidarity and philanthropic relationships, break away from politics as a means to protect the vested interests of a powerful minority, share a sense of identity, allow civil society to become the mediator of harmony between the market and the state in order to transition toward a politics of many based on balanced interests. In conclusion, the concept of liberalism must present a new logical basis in response to the historical challenge that it faces, and strive to surpass material constraints in presenting the logic of altruism without contradictions, as opposed to the definition of ethical concepts for the logic and legitimization of self-interest. However, it cannot be overlooked that the issue of survival remains a fundamental part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reality. Nonetheless, this paper emphasizes that this factor does not necessarily connote a selective survival between life and death, but rather the realization of self-interest through autonomy. In the future, regionalism must contemplate its response to the dual challenges of enhancing autonomy and resolving the formation of competing blocs.

特朗普现象与自由世界秩序的危机

車允西 (中央大学国益研究所 专任研究员)

本文主要探讨唐纳德·特朗普当选对世界政治经济意义，与新美国行政部的对外战略方向。

为此分析脱冷战期美国大战略的连续性与变化，指出特朗普行政部会脱离原有的自由主义协议，而施行新的杰克逊主义对外政策。预测特朗普的外交政策对东北亚地区与韩半岛的影响，探讨特朗普当选对来自自由世界秩序的时代意义和对韩国国家战略的含义。

不断变化的自由主义国际秩序与歧路上的东亚地区金融合作的现在与未来

李容旭 (高丽大学 教授)

从2013年起，由G20与IMF联合主导提出了有关全球以及地区层面的金融安全网相互协作的必要性。反过来说，全球以及地区层面的金融安全网政策协作削减了东亚金融协作的义务与功能。从东亚的立场来说是需要与IMF进行政策协作，但以现阶段东亚金融协作情况来看，与IMF的政策协作有可能会成为一把双刃剑。双刃剑的消极层面是指东亚金融协作终究会成为IMF的次量级合作伙伴，所以需要尽快加强东亚金融协作力度。2018年东盟+3会议将是韩国金融外交的机会与挑战。明年2018年5月韩国作为东盟+3财务长官会议的联合议长国，获得了倡导强化东亚金融协作力度的机会。尤其是在明年的会议上将首次定期检讨并修改2010年东盟+3会议时签下的CMIM协议，使得2018年的会议成为决定东亚金融协作成败的关键。在这种背景下，此报告为求东亚金融协作的再度飞跃提出了三点韩国金融外交政策方向。第一、确立有关东亚金融协作的“共同主人意识”(We-Ownership)。第二、提高协商过程中间歇性提到的“道德性松弛谈论”的反省脉络化(Reflexive Contextualization)以及成员国间信赖度。最后、东亚金融协作超越“制度性生存”，通过谈论外交在成为其他地区金融协作典范的前景上达成共识。

俄罗斯自由主义的局限： 特朗普上台后的俄罗斯对外政策

鄭在原 (國民大學 教授)

乌克兰危机以后，与西欧对立的俄罗斯表面上是反美/反西欧的立场，而实际上并不反对自由民主主义体制，反而更加积极应对的现象值得我们关注。也就是说在世界资本主义体制下，俄罗斯面临着地理位置和作用的局限，认识到为了排除西欧国家的障碍寻求突破，无法拒绝当今的（新）自由主义国际政治经济秩序本身。俄罗斯无法主导世界资本主义体制，作为连接远东和西伯利亚开发以及亚太地区与欧洲的欧亚大陆强国，为了实现突破，即便是国家主导也不能拒绝（新）自由主义秩序，实施孤立主义或自我主义政策。而且与西欧的对立中，新设远东开发部、强化与中国的同盟关系、扩大石油天然气出口国范围、通过欧亚大陆经济联合和上海合作组织等多个国际组织强化反西欧立场、重视亚洲。可是这并不意味着体制的根本性变革。因此俄罗斯利用地缘地政学的特殊性，展开与西欧相反的（新）自由主义，同时在（新）自由主义的原则下与包括韩国的亚洲国家互相协助的可能性较高，甚至为了开发很有可能与西欧国家资本积极合作。俄罗斯特色的自由主义根据俄罗斯与欧亚的地缘地政学、地经学状况，同时展开相互矛盾的两个政策。欧亚地区的大规模开发并不属于金融，而属于实体经济资本。即便这些地区和国家经受不起先进的现代化开发和发展，韩国也要展开更先进、可共生的独到战略。

自由主义以后的区域主义： 英国脱欧与特朗普上台后的区域主义课题

都鍾允 (濟洲平和研究院 地区综合研究部长)

21世纪西欧各地发生的恐怖袭击事件与2008年美国华尔街金融危机当时，世人开始怀疑美国主导的新自由主义经济秩序。与2016年5月的英国脱欧同年的11月，美国唐纳德·特朗普当选使得很多专家对自由主义国际秩序有了危机感。实际上2017年初国际经济关注的两个现象还是英国脱欧和美国通商政策的变化，两者都反应了国益优先的意识。一方面区域主义是以自由主义所产的全球化(globalism)为背景，通过多边主义、民主治理等引导区域合作的，一种政治性、经济性、社会性过程。在这种前提下，支撑20世纪中期美国主导的国际自由主义现实与自由主义基地中，功能化的区域主义在自由主义危机以后将何去何从，我们将如何应对是本文要探讨的重点。本文认为如果能从霍布斯视角说明自由主义以前的国际关系，自由主义原理依据约翰洛克(John Locke)和约翰·斯图尔特·密尔(John Stuart Mill)的关系，自由主义以后的国际关系将与区域主义根据社会、文化、道德规范等越发互惠，通过水平关系得以实践。也就是说，超越霍布斯的对立关系和洛克的竞争关系以后，将伊曼努尔康德视角的关系规定视为“亲善(friendship)”，成为今后的核心课题。最近正在议论中的“先进自由主义”或“快速自由主义”等都在强调，需要恢复经济定义与相互性，强调社会连带和博爱关系，从谋求少数既得权势利益的政治中解脱出来，共享本质，并以市民社会为媒介实现市场与国家的协调，施行以均衡利益为基础的更多人参与的政治。最后，自由主义意识面对时代的挑战，需要重新提出理论根据，解开物质上的束缚，为谋求自我利益的正当化，做出并非道德概念设定和自救逻辑的，与利他逻辑并不矛盾的努力。可是现实政治仍然不能忽视国际关系的核心—生存问题。但是这个原因并不能预测生与死的选择性生存，而是通过增强自律性实现自我利益，今后区域主义的自律性增进与强国引领的竞争性区域化，是我们需要苦恼的双重课题。

Changes and Challenges in Regionalism after Liberalism

自由主义以后区域主义的变化与课题

- 4 <Lead Essay> A New Blueprint for ROK-EU Relations:
The Northeast Asia Plus Community and the Restoration of Regionalism
<卷首论文> 韩-EU关系新的史册: 东北亚Plus负责共同体与区域主义的复原
DOH Jong Yoon (Chair of Regional Integration Program, Jeju Peace Institute)
- 13 The Trump Phenomenon and the Crisis of the Liberal World Order
特朗普现象与自由世界秩序的危机
CHA Taesuh (Research Fellow, Institute of National Interests, CAU)
- 28 The Changing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the Present of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at a Crossroads
不断变化的自由主义国际秩序与歧路上的东亚地区金融合作的现在与未来
LEE Yong Wook (Professor, Korea University)
- 41 Limits of Russian Liberalism: Russian Foreign Policy after the Emergence of Trump
俄罗斯自由主义的局限: 特朗普上台后的俄罗斯对外政策
CHUNG Jae-Won (Professor, Kookmin University)
- 59 Regionalism after Liberalism:
Challenges for Regionalism Following the Emergence of Brexit and Trump
自由主义以后的区域主义: 英国脱欧与特朗普上台后的区域主义课题
DOH Jong Yoon (Chair of Regional Integration Program, Jeju Peace Institute)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5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